주간통일정세 2009-20(2009.05.11~05.1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20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美전문가들이 보는 北 김정운 후계 구도(5/13,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북한전문가들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운의 후계자 내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실제 정운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느냐는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
- 방송은 "미국 전문가들은 과거에 정운씨가 나이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탓에 그의 승계 문제는 불투명하다고 무시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며 켄 코스 해군분석센터연구소 해외지도자 연구이사 등의 견해를 소개
-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도 고스 이사의 진단에 동의하면서 '150일 전투'와 5.1절 기념행사 등은 "모두 정운이 후계자로서 업적 쌓기에 나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
- 이들은 그러나 앞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건재 기간과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향후 역할을 꼽음.

北, 보안기구 대상 김정운 후계 알려(5/12, NK지식인연대 홈페이지)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삼남 정운(25)에 대한 특별강연회가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간부들을 대상으로 열렸다고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
- 이 단체는 "현지 통신원의 정보"를 인용해 4월18일 량강도 보안국(도 경찰총국) 회의실에서 군, 구역의 보안서장들과 보위부장들을 대상으로 열린 강연회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영명하신 김정운 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뤄졌다고 소개
- 이 단체 통신원은 "특별강연회 참가자들은 도 보안국장이 강연회의 제목을 발표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만세를 불렀다"고 전하고 강연자는 김정운의 "혁명적" 가계와 그의 학력과 "혁명활동 약력"을 소개했다고 전언, 강연자는 또 "김정운 대장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장군님(김정일)의 선군영도를 보좌하고 있다. 장군님의 탁월한 영군술을 높은 경지에서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계시는 또 한분의 선군영장을 모신 것은 대대로 수령 복, 장군 복을 지닌 우리 민족의 긍지이고 자랑이다"고 말했다고 통신원은 소개

○ **北김정운 후계 업적쌓기 본격 시동(5/11,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삼남 정운(25)이 새로 시작된 '150일 전투'를 주도하는 등 후계자로서 업적쌓기에 본격 나선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운은 5월 1월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관찰을 포함해 김 위원장의 각종 공개활동에 빠짐없이 수행, 후계자로서 "수령을 보좌하고 받드는 혁명 활동" 행보를 이어가면서 미래에 내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업적쌓기'에 박차
- 정통한 소식통들은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을 위해 이달부터 시작한 새로운 속도전인 '150일전투'와 전례없이 성대하게 치른 5.1절(국제노동절) 기념행사와 고 김일성 주석의 97회 생일기념 '축포야회'가 김정운의 '작품'이라고 소개

나. 정치 관련

○ **대남 교류협력 총괄 최승철 처형설(5/19, 연합)**

- 남한의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의 대남사업을 사실상 총괄했던 최승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수석 부부장이 '대남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작년에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짐. 대북 소식통은 18일 "표면적인 이유는 남북교류 과정상의 개인 비리지만 실제로는 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오판'과 남측의 햇볕정책이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북한 당국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
- 이 소식통은 "최 부부장은 내부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남한과 관계 진전을 강력히 밀어붙였고 10.4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일선에서 지휘했으나 남한의 정권교체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정책판단 실책 등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희생양이 돼버렸다"고 해석
- 다른 대북 소식통도 최 부부장이 처형당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실제 북한이 최 부부장에게 씌운 가장 큰 죄목은 북한 사회 전반에 대남 의존도를 키우고 대남 환상을 심어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북한 내부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대남분야 종사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기도 하다"고 해석
- 남한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북한에서 그의 모습은 사라졌으며, 황해도의 한 '닭공장(대형 양계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 1월초 남쪽에 전해지기도 했으나 그때는 이미 처형당한 뒤였던 것으로 이번에 밝혀짐.

○ **北, 5·18맞아 반미, 반정부 투쟁 선동(5/18,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18일 '반미, 반파쇼 투쟁사에 아로새겨진 영웅적 항쟁'

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의 민주화,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반미, 반파쇼 항쟁"인데 "지금도 외세와 매국노들에 의해" 남한 주민들이 "민주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미 자주화 투쟁"을 벌이고 "반역 무리들의 외세의존 책동"을 분쇄해야 한다고 선동

- 우리민족끼리도 '광주의 피의 교훈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광주 학살만행의 장본인'이라는 등의 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남한 주민들은 미국이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임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반미 투쟁"을 부추김.
- 평양방송은 5.18민주화운동이 "좌절"됐지만 "미제의 식민지 파쇼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남한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크게 고무추동한 인민적 대중봉기"였다고 소개

北, 남남갈등 적극 조장(5/17, 조선일보)

- 북한이 최근 대남 관련 기구와 담당자들에게 6·15 및 10·4 남북공동선언 수용을 둘러싼 '남남(南南) 갈등'을 적극 조장토록 지시했다고 베이징(北京)의 정통한 북한 소식통이 17일 밝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탈북한 한 노동당 간부는 "북한 (대남) 당국으로부터 '(남한 내부의) 혁명역량을 보유한 민주세력과 6·15 및 10·4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을 지원해 북남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을 대중투쟁의 목표로 삼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
- 이 간부는 특히 "북한 당국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며 남한의 총선·대선이 있는 2012년에 (남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통일역량을 강화해 나가라'고도 지시했다"고 소개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6월 15~10월 4일까지 '민족공동선언 이행운동' 등 다양한 통일운동을 남과 북, 해외에서 동시에 추진하되 "남한에서는 6·15 선언을 지지하는 정당·단체·인사들과 연계해 반(反)이명박정권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소개

北, 美, 대화 원하면 적대정책 바꿔야(5/17,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7일 '미국의 삽살개 노릇이 그리도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시 "응분의 대가"를 언급하는 데 대해 "미국의 손탁(손아귀)에 쥐어사는 리명박 패당이 횡설수설한다고 해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단 결심하고 선포한 것을 변경할 우리 공화국(북한)이 아니다"고 주장
- 신문은 "미국의 현 행정부는 이처럼 대화의 간판을 내걸고 그 막뒤에서 우리나라를 힘으로 압살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고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됨이 없이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어 “미국이 진심으로 조미대화를 원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

北, 李국방 발언에 파멸·죽음으로 응전(5/16, 조선평화옹호전국위원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방송)

- 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위원회는 최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제3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전해야 한다고 장병들을 독려한 것과 관련,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맹비난, 위원회는 “얼마 전 국방부 장관이 있지도 않은 우리측의 도발에 대해 거론하면서 당장 전투가 일어나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비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위원회 대변인은 “이명박정부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가 극도로 첨예한 때에 호전광들이 또 다시 우리를 겨냥해 늘어놓은 전쟁폭언과 무모한 불장난 소동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려는 지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책동”이라고 규정하고 “이명박정부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공공연히 역행해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기 위해 발악한다면 돌아갈 것은 파멸과 죽음 뿐”이라며 “호전광들은 동족대결에 환장한 나머지 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날뛰고 있다”고 경고

北, 제재발동은 선전포고(5/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자주적 대를 틀어쥐고 대조선 제재 모략책동을 제압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발동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그에 강경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주장
- 신문은 유엔 안보리의 사죄를 재차 요구하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공화국(북한)은 이미 선언한 대로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포함한 추가적인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北 국제상품전람회 폐막, 대부분 중국업체(5/15, 조선중앙통신; 5/16, 조선신보)

- 평양에서 5월 11일 개막한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14일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통신은 이 전람회에 참가한 업체들 사이에 “적극적인 경제거래 활동이 진행”됐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밝히지 않음.
- 전람회에는 중국, 러시아, 독일, 말레이시아, 시리아, 스웨덴, 싱가포

르, 베트남, 태국 등의 200여개 회사와 단체들이 참가했으며, 공작기계, 전기 및 전자 설비, 윤전기재,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 등 1만5천700여종 6만5천700여점의 상품이 전시됐다고 통신은 소개

- 중국산 냉·온풍기와 호주산 쇠고기, 북한산 수산물가공품 등이 인기를 끌었다고 조선신보가 16일 보도, 북한 업체 중에서 처음 전람회에 참가한 수채봉수출수산합작회사는 동해산 수산물 가공제품들을 출품해 호평을 받았으며 "제품거래를 요구하는 회사들의 상담, 면담 요청이 쉴 새 없이 들어왔다"고 동기명(42) 사장의 말을 인용해 신문은 보도
- 이번 전람회에는 북한의 60개 회사와 해외 17개국의 167개 회사가 참여해 모두 6만5천여점의 상품을 전시했으며 '북중친선의 해'인 올해 전람회 참가 중국 기업만 100개를 넘어 따로 중국관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짐.
- 오는 9월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가을철상품전람회는 봄철 전람회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벌써 이집트의 오라스콤 등 대기업들이 참가 신청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北, 흙원료 흡음판 공연장에 설치(5/15, 조선신보)

- 북한의 정향기술교류사가 흙을 원료로 한 흡음판을 개발, 대형 공연장에 설치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5일 소개
- 2007년 3월 설립된 건자재 전문 정향기술교류사의 칠감, 방수재, 보온재, 흡음판 등 건자재들은 평양대극장, 동평양대극장, 대동문영화관과 옥류관, 청류관 등 식당의 개축공사에도 사용되었음. 북한의 '노력영웅' 겸 '인민과학자'인 정종근(65) 사장은 "회사는 새 제품 개발 연구의 중심에 원료의 국산화, 최고의 질적 담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며 "회사의 제품들이 해외에서도 호평 받으리라 믿고 있다"고 답변

北, 150일전투 독려 경제선동 활동 강화(5/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지금 조선(북한)에서 150일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는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기 위한 경제선동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중앙예술단체인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국립연극단 등이 '중앙예술단체 예술인경제선동대'를 구성해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서 생산 독려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
- 또 만수대예술단, 영화 및 방송음악단을 비롯한 예술단체 예술인들은 금성뜨락또르(트랙터)공장과 2.8비날론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을 돌면서 현장 경제선동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

○ **北, 70일전투처럼 150일전투 달성 촉구(5/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150일 전투에서 새로운 대고조 진군속도를 창조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새로 시작한 속도전인 '150일 전투'에서 지난 1970년대 '70일 전투' 등을 계승해 "새로운 대고조 진군 속도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새로운 대고조 진군 속도를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간부)들이 당의 기초축성 시기 일군들처럼 150일 전투를 본때있게 조직지휘하여야 한다"며 "당의 기초축성 시기 일군들은 70일 전투 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고 강조

○ **北, 올해 첫 벼 모내기(5/13,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증산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평안남도의 평원군 원화협동농장과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에서 올해 첫 벼 모내기가 시작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

○ **北, 모내기 사업 총동원령(5/11,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11일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올해 모내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온 나라가 모내기 전투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야 한다"며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노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하고 농사일에서는 네 일, 내 일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신문은 "농사는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라며 "전력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기관, 기업소들과 일꾼들은 농사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모내기 전투에 필요한 전력과 영농물자를 최우선으로 무조건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과학기술자들이 발전에 큰 몫 수행(5/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의 발사를 비롯한 북한 과학기술자들의 성과를 들며 "해방 후 빈터 우(위)에서 출발한 조선(북한)의 과학기술은 오늘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3대 기둥의 하나"라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
- 통신은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100% 자체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가 지금 자기 궤도에서 정상가동을 하고 있다"고 거듭 '정상가동'을 주장하며 "이것은 우리나라 우주응용과학기술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라고 주장

○ **亞역도선수권서 금1, 은8, 동8 획득(5/17, 조선중앙통신)**

- 제21차 아시아 여자역도선수권대회와 제40차 아시아남자역도선수

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금 1, 은 8, 동 8개의 메달을 따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58kg급의 박현숙은 인상과 용상, 종합 등 3개의 은메달을 획득

○ **北, 해외 신종플루 지속에 방역 강화(5/17,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7일 "국가비상방역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돌림감기 바이러스가 아직 우리나라에 전파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 바이러스의 침습을 막기 위한 사업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
- 방송은 "비행장, 무역항 등에 측정장치를 설치해 여행자들과 식료품들에 대한 검역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격리시켜 확진될 때까지 의학적 감시를 해서 이 병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
- 평양방송도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갖추고 과학연구를 심화시키며 돼지를 기르는 단위들에서 수의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

○ **北의료진, 재미동포 의사들과 공동수술(5/12, 조선신보)**
- 제11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4~5일)에 참가한 재미교포 의학자들이 북한 의료진과 공동 수술을 진행했다고 조선신보가 12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재미조선인의학자대표단 관계자들은 6-8일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기술협의회와 공동 수술을 진행
- 신문은 이어 북한 의사들과 재미교포 의학자들이 여러가지 기술 문제와 북한의 의학발전 문제들에 대해 협의했다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美, 北 6자회담 복귀가 목표(5/12,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12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문제 검토와 관련,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결과적으로 북한 방문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그 목표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
- 켈리 대변인은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우리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라면 북한과 직접 대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면서 방북 검토의 목표가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 앞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도쿄에서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현지 기자들과 만나 "방북이 미국에 의해 완전히 좌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수 주간에 걸쳐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음.

보즈워스, 6자회담 위기상황 아니다(5/12,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일 북한이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핵무장 위협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6자회담이 위기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라고 언급, 6자회담 참가국들을 순방중인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제외한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 모두는 현 상황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 북한이 향후 실시하겠다고 위협하는 핵실험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만이 현재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다"라며 미국은 6자회담 틀 내의 대북 직접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

나. 북·미 관계

美, 北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우려 또 제기(5/18, 연합)

- 미국 정부 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최근 다시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 18일 미 의회에 따르면 ODNI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량파괴무기 및 첨단무기와 관련된 기술 획득 보고서(Unclassified Report to Congress on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Relating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Covering 1 January to 31 December 2008)'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거론
- 보고서는 2008년 한 해 동안 북한의 핵관련 활동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의 일부를 불능화했지만, 우리는 적어도 과거에 북한이 우라늄농축 능력을 추구했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밝힘.

스웨덴 대사, 北억류 美여기자들 면담(5/15, 미국무부)

-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15일 북한에 억류중인 2명의 미국 여기자들을 만났다고 미 국무부가 소개,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미국을 대신해 15일 억류중인 2명의 미국인 기자들을 만났다"고 전언, 그는 "스웨덴 대사는 앞서 3월 30일 이들을 만난 바 있다"고 말했다.
- 북한이 이들 2명의 여기자 면담을 허용한 것은 3월 30일 이후 거의 7주 만에 처음임. 북한은 3월 말 면담 후 그동안 거듭된 미국과 스

웨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허용하지 않았음.

美, 北 개성공단 경솔행동 도움 안돼(5/15, 미국무부)

- 미국은 15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기존 계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난,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북한의 이런 경솔한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나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고 "미국은 모든 당사국들의 이익인 남북한 간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北 억류 美여기자 1명 건강 안 좋아(5/1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중 1명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 방송은 "두 명의 여기자 중 한명이 지병으로 의약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의약품을 전달했지만 의약품이 여기자에게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

美, 北 여기자 재판 우려(5/14, 미국무부)

- 미 국무부는 14일 북한이 미국적 여기자 2명에 대해 재판을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미국적 기자들의 신변을 걱정하고 있으며, 그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 품에 조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여기자들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그들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밝힘.
- 하지만 켈리 대변인은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파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 시점에서 누구를 평양에 보내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

北, 美여기자들 6월4일 재판(5/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해당기관의 기소에 따라 6월4일 미국기자들을 재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적용 혐의나 두 여기자의 상태 등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음.

北, 교향악단 미국공연 계속 추진 요청(5/12,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 뉴욕의 북한대표부 관계자들이 최근 프레드 캐리어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을 계속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캐리어 부회장이 12일 미국

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힘.

- 캐리어 부회장은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이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반발해 또 다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는 등 정치적 기류가 악화됐다"며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은 악단 관계자 뿐 아니라 (북한) 정부 고위 관리들의 방문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 등 여러 면에서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

美의회, 北우라늄농축 지원금지법 발의(5/12, 연합)

- 북한과 이란, 시리아로에 대한 우라늄 농축 시설, 기술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11일 확인됨.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소위 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5월 6일 '2009 국제 우라늄 추출 및 가공통제법안'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

美국방, 北, 전쟁간주 위협은 수사(5/11, 미국방부)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남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방침을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위협발언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밝힘. 게이츠 장관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최근 몇주에 걸쳐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수사들에 대해 솔직히 놀랍고 혼란스럽다"면서 "북한은 이런 식의 수사를 통해 전보다 더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해왔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PSI 참여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내가 생각하기로는 수사로 본다"고 언급

北, 유엔서 美의 대북방송 비난(5/11, 조선중앙방송)

- 유엔 본부에서 5월 4일 열린 '유엔 공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새롭고 공정한 국제 공보통신 질서" 수립을 주장하면서 특히 미국이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북한의 체제전복을 사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
- 북한 대표는 이 회의에서 "오늘 일부 나라들이 공보기술과 수단을 독점하고 다른 나라들에 저들의 가치관과 생활풍조를 전파시킬 뿐 아니라 왜곡된 정보를 유포시키면서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 제도전복을 사촉(사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화국(북한)과 아시아 나라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그 대표적 실례"라고 주장

조선신보, 美에 북미대결관계 청산의지 입증 요구(5/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1일 '오바마 정권 대조선 외교의 첫 단추' 제목의 기사에서 오바마 미 행정부에 대해 "대조선(대북) 외교의 새 접근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낡은 대결관계를 청산하려는 미국의 의지

를 조선측이 인정한 조건에서만" 양자든 다자든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6자회담 등 "기존의 외교틀이 허물어진 조건"에서 대화 재개를 위해선 "우선 외교협상의 동기를 확인하고 그 목적을 정해야 한다"며 "더우기 조미(북미)와 같은 교전 쌍방의 경우, 무엇을 논의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서로 모른 채 마주앉을 수 없다"고 주장

다. 북·중 관계

○ 北·中 친선도시대회 개최(5/1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과 중국은 12일 평양에서 '조(북)·중 친선도시대회'를 열고 교류와 협조,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양국 도시들 간의 결연을 늘려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대회에서 "친선 도, 성, 시들 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여러 도시들이 친선관계를 맺고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
- 보도문은 "친선도시들이 앞으로도 호혜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뜻 깊은 '조-중 친선의 해'를 빛내는데 적극 이바지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도문은 강조
- 대회에는 전영진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와 조선도시연맹 대표들, 중국의 도시들과 친선관계를 맺고 있는 황해남도, 강원도, 평안남도, 라선·남포·함흥·청진시와 평양시 만경대구역 대표들, 방북한 중·조 우호협회 대표단과 중국 장쑤·산둥·쓰촨성, 상하이·지린·훈춘·창춘시 대표들과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 대사가 참가

○ 中 옌볜자치주 안투현, 북한 변경관광 허용(5/12, 흑룡강신문)

-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의 단둥과 투먼에 이어 옌볜자치주 안투현도 북한 변경관광이 허용되었음. 중국 당국은 6월부터 안투현과 북한 삼지연을 연결하는 쌍목봉 관광통상구를 개통, 중국인들이 북한 변경 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흑룡강신문이 12일 보도
- 안투현은 창바이산(백두산) 주봉 및 천지와 20㎞ 거리에 있고 삼지연과도 불과 35㎞ 떨어져 있으며 쌍목봉 통로는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 통로로서 이번 변경관광 허용으로 중국 관광객들은 비자 발급 없이도 북한쪽 백두산을 관광할 수 있게 됨.

라. 북·일 관계

○ 北, 日 아소 총리 비난(5/14, 노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은 14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이달 초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체코와 독일을 방문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문제 등을 거론한 데 대해 "정치시녀의 구걸청탁" 등으로 비난
- 노동신문은 '창피를 모르는 정치시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아소 총리의 "이번 유럽 행각은 구걸행각, 청탁외교"라며 그가 "지금처럼 앞뒤를 가려보지 못하고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에 환장하여 돌아치다가는 (단명한 전 총리인) 아베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 민주조선도 '만화애호가의 망측한 추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아베의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아소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日 방위성, 北 미사일 장거리화 진전(5/14, 교도통신)

-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미사일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검증"이라고 평가하면서 사거리 연장이 이뤄졌다고 분석
- 14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사거리는 3천㎞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의 명중 정밀도 향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 그러나 이 로켓이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림.
- 자료에 따르면 방위성은 북한이 지난달 5일 오전 11시30분 액체연료를 사용해 발사한 로켓은 대포동 2호 또는 그 개량형으로 보고 있으며 외견상 3단식으로 보이지만 3단의 경우 추진장치가 장착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음.
- 1단계 추진체는 오전 11시37분께 아키타(秋田)현 앞 300㎞ 해상에 낙하했고, 2단계 이후는 일본 도후쿠(東北) 지역 상공을 통과해 11시46분께 북한의 발사 시설에서 3천㎞ 이상 떨어진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방위성은 분석, 미국 정부는 2단계와 3단계가 분리다고 분석했지만 일본 방위성 보고서는 일본이 확보한 자료로는 분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마. 북·러 관계

○ 러 맥주회사, 北대동강맥주와 협력 강화(5/17, 조선신보)

- 러시아의 대표적인 맥주회사인 발티카의 올레그 알료힌 중국 총괄사장은 "앞으로 발티카맥주회사에 관심을 가지는 조선(북한)측 맥주공장들과 협조를 깊이 할 것"이라며 "특히 이미 전부터 협조경험이 있는 대동강맥주공장과 적극적인 협력을 더 활성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17일 보도
- 5월 14일 끝난 제12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발티카 맥주회

사 대표단의 단장으로 참가했던 알료힌 사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발티카 맥주회사는 근면하고 성실한 조선의 벗들과 친선과 우정, 호상협조의 관계가 더욱 더 발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대동강맥주공장의 기술자들은 지난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두 차례 러시아 발티카 공장에서 맥주제조 기술을 연수, 발티카측은 2003년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와 모스크바에서 북한 무역성과 발티카 맥주 공급문제를 논의해 2006년 대북 수출에 합의했으며 2007년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

바. 기타 외교 관계

○ 北·이란 친선주간 행사 개최(5/14, 조선중앙통신)

- 고 김일성 주석과 이란의 이슬람교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만남 20주년을 기념하는 '조선(북한)·이란 친선주간'에 즈음해 기념집회와 영화감상회가 14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친선주간에 즈음해 머르테자 머로디온 북한주재 이란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서 기념식수를 진행

○ 北보안성, 짐바브웨 내무부와 협력합의서 조인(5/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보안성(남한의 경찰청)과 짐바브웨 내무부가 1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양측 사이의 협조합의서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그러나 통신은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조인식에서는 북측의 주상성 인민보안상과 짐바브웨의 켐보 캠프벨 두기쉬모하디 내무장관이 서명

○ 北학생들, 영어 배우려 캐나다인 가정서 홈스테이(5/14, 자유아시아방송)

- 영어를 배우기 위해 캐나다에 파견된 북한 학생들이 캐나다인 가정에서 기숙하면서 캐나다 교육기관이 마련한 영어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캐나다 민간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4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의 민간단체 ELIC(English language Institute in China)는 4월말 캐나다 인으로 구성된 5~6명의 영어 원어민 교사단을 북한에 파견, 3주 일정으로 평양에 있는 대학 교수와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법과 영어회화를 가르치도록 했음.
- 대북 지원을 하는 미국의 한 단체도 올해부터 북한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확대, "평양의 학생들에게 실용영어를 교육하기 위해 파견 교사를 증원하고 교육 기간도 연장한다"고 말했으나 단체 이름을 밝히기는 거부

- 영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영어 원어민 교사 파견지원 사업을 당초 지난해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말 북한측의 요청에 따라 2010년까지 연장키로 하고 파견 교사의 수도 늘렸음.
- 또 캐나다의 비정부기구 게인(GAIN:Global Aid Network)도 지난 2005년 이후 중단됐던 영어 원어민 교사 파견사업을 북측과 합의에 따라 올해 다시 시작, 평양금성학원의 컴퓨터 수재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을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북한에 보낼 예정

양형섭, 미얀마대표단과 담화(5/13, 조선중앙통신)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우 마웅 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얀마 외무부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미얀마 대표단장은 양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

北·브라질 외무장관 회담 (5/13, 연합)

- 북한 박의춘 외무상과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이 브라질리아에서 회담을 갖고 통상 확대를 포함한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했다고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 박 외무상은 11일 브라질리아에서 아모링 장관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통상 확대 외에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및 핵개발 계획, 인권 문제 등도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소개
- 박 외무상의 방문은 브라질이 지난해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한 뒤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관은 오는 29일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초대 대사에는 아르날도 카힐료가 임명됐음.

北여자축구 대표선수 2명, 독일서 훈련중(5/12,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

- 북한 청소년 여자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 2명이 독일의 한 여자 프로축구팀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12일 보도, 신문은 15세인 북한의 전명화와 김은향 선수가 5월 8일 독일에 도착한 뒤 1주일 일정으로 여자프로축구 1부 리그 'FFC 투르빈네 포츠담'에서 훈련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외국에서 훈련하는 북한 최초의 최고 축구선수들"이라고 밝힘.

北김영남,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5/11, 조선중앙통신; 5/16, 조선중앙방송)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0일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 양측은 남아공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싱가포르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 리룡남 무역상, 김형준 외무성 부상 등도 함께 귀국, 공항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대표단을 맞음.

3. 대남정세

○ 유모씨, 개성 자남산여관에 억류(5/18, 연합)

-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가 개성시내 자남산여관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짐. 대북소식통은 "지난 16일 확인한 결과 유 씨가 개성공단 인근 자남산여관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초 억류 장소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건물에서 언제 옮겨졌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소개
- 이와 관련,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 씨의 신상에 대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나 현대아산을 통해 정부가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개성인근 지역에 있고 건강이나 안전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힘.

○ 남북 18일 회담 제의, 北 응답 없어 무산(5/17, 통일부)

- 정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북측에 제의한 18일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보임.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오늘 밤 10시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서 "18일 회담이 열리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힘.

○ 인천서 北에 보낼 우유·분유 출항식 개최(5/15, 연합)

- 남북평화재단과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는 15일 인천항 1부두에서 출항식을 갖고 우유와 분유를 실은 배를 북한으로 보냄. 이날 인천~남포간 정기선에 실어 보낸 우유 2만팩(개당 200㎖)과 분유 500캔(캔당 800g)은 16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앞으로 도착할 예정

○ 北 "새 법규 못받겠으면 나가도 무방"(5/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5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 임대값과 토지 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

효를 선포한다"고 밝힘.

- 통지문은 이어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지문은 이러한 조치들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 통지문은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하고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
- 우리 정부가 제2차 남북 개성접촉의 의제로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북측 통지문은 "부당한 문제"라거나 "의제 밖의 문제"라고 거부 입장을 밝힘. 통지문은 유씨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유씨 문제를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하는 것은 "실무접촉을 또 하나의 북남대결장으로 만들어 공업지구 사업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 행위"라고 주장
- 통지문은 "남측이 기어이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대결적 자세로 대답해 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이미 예고한 대로 협상을 통하여 논의하려던 입장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

○ 아남제약, 北임산부·아동용 의약품 6억원 기증(5/13, 연합)

- 아남제약(대표 백승흠, 백경흠)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6억1천만 원 어치의 항생제 등 의약품을 대북지원 단체인 민족사랑나눔(이사장 림인식 목사)에 기증, 민족사랑나눔측은 이들 의약품을 북한 '민화협'을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임산부와 어린이들에게 보낼 예정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10월까지 플루토늄 8kg 추출가능"(5/16)**

- 핵활동 재개를 선언한 북한이 현재 보관중인 사용후연료봉(폐연료봉)에서 오는 10월까지 무기급 플루토늄을 8kg가량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됐음.
-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핵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15일 원자과학자학회지 기고문에서 영변 5MW(메가와트) 원자로의 8천개 폐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하는 것은 6개월이면 가능하며, "모든 팩트들을 고려할 때 북한이 잘하면 올 10월까지 8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고 밝혔음. 지금까지 총 5차례 방북해 영변 핵시설 등을 둘러봤던 그는 8천개의 폐연료봉을 통해 최대 12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지만 영변 원자로의 출력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같이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
- 그는 또 현재 북한이 보유중인 사용전연료봉의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한이 향후 2-4년간 연간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최대 6kg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고 예상했음.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 이전에 생산한 사용전연료봉 중 2천개는 즉시 원자로에 장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1만2천개는 마그네슘 도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고 그는 전했음.
- 헤커 교수는 "소형화되고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핵)폭탄을 만들려면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한차례 이상 더 해야만 한다"면서 "만일 북한이 8kg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추가 핵실험을 결심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그는 북한이 26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해 무기화한 것으로 그동안 신고했다면서 이는 4-8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의혹과 관련, "북한이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제출한 두 가지의 아이템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고농축 우라늄 흔적을 찾아낸 뒤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의심이 증가됐다"고 전했음.

○ **"北 핵미사일 개발 우려 확산"<FT>(5/15)**

- 북한이 최근 핵문제와 관련해 강경 입장을 취하는 것은 미국과의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핵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5일

보도.

-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서도 완벽한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 "2012년까지 핵 탑재 탄도미사일을 완성한다는 '비협상 전략'을 구사키로 결정했을 것"으로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FT는 전했음.
- 미국과 한국은 지난 몇 년 간 북한의 위협 발언이 6자회담 틀 안에서 식량 및 석유, 안전보장을 받아내려는 시도로 풀이했지만 최근 움직임에 대해선 달리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FT의 분석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 FT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그들(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을 바라지만 돌아오지 않을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면서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견해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음.
- 또 초기에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신임 대통령을 시험해보려고 핵 위협 발언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2012년 강성대국 달성' 전략의 하나로 핵무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FT는 밝혔음.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보다 낙관적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FT는 전했음.
- 지난 1월까지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는 "오바마 정부 팀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의 호전적 발언은 건강이 악화된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자 승계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내부 결속용일 것이라고 말했음.

"北, 핵 불포기 결단 내린 듯"<전문가>(5/15)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원장 김성한)과 한국국방안보포럼(대표 김재창·김동성)은 1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됨.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호놀룰루 지사격인 '퍼시픽포럼 CSIS'의 랄프 코싸 소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다음 갈 곳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으며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나 협상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코싸 소장은 "이런 결정에 대응하려면 당근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비확산 차원의 '봉쇄정책'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함. 특히 그는 "북한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6자회담을 개최하고 유엔 결의안 1718호의 엄격한 시행과 점진적인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가 성공하려면 한·미·일 3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미국 국방연구원(IDA)의 오공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한국 국민들의 비판의식이 높아졌고 북한 역시 한미동맹 이간책을 구사해 한·미가 정치관계를 관리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한·미가 핵심적 현안인 대북정책 조율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북한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 정권이 강성대국 건설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긴장과 위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진단한 뒤 "과도하게 강경책을 쓰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함.
- 이어 고려대 이동선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한·미 FTA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이란 일반적 통념은 이론적, 경험적으로 의문시 된다"며 "FTA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오히려 동맹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함.

"北, HEU 시설 없는 듯"<美전문가>(5/14)

-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기술을 일부 얻었을 수 있으나 농축시설을 갖추지 못해 HEU계획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적다고 우라늄 농축기술 전문가인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스콧 캠프 교수가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4일 전함.
- 캠프 교수는 13일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와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가 공동 주최한 핵관련 세미나에 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HEU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기술은 이란과 같은 나라로부터 얻었을 것이지만 이란은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HEU계획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자원과 재원이 부족한 북한이 자체 HEU계획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함. 그는 "그러나 HEU 시설은 플루토늄 핵개발 시설보다 훨씬 탐지가 어렵고 다른 방법으로도 쉽게 위장이 가능하다"고 경계함.
- 우라늄농축 시설은 냉각탑 부재 등으로 인해 위성탐지가 곤란하고 열을 많이 내지 않아 적외선 신호로도 구분이 불가능하며 시설내의 저기압으로 인해 우라늄 입자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는 등 탐지가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쌍방간 사전합의에 따라 사찰관들이 필요한 때에 핵 시설을 방문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같은 접근이 이뤄지려면 먼저 상대국과 사회적 투명성의 기준을 수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북한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검증체계 구축을 위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캠프 교수는 강조함.
- 그는 "북한은 재정적 지원과 에너지, 연료, 식량을 얻기 위한 수단

으로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사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정을 이루면 그 같은 위험한 기술을 판매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음.

○ 김태효 "北, 핵무기 갖고 대미수교 안돼"(5/14)

-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14일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도 수교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밝힘.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강원도 동해항에 정박한 세종대왕함에서 개최된 해군의 제13차 함상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안타깝게도 지금 북한은 꼭 버려야 할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꼭 가야할 새로운 길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함.
- 김 비서관은 "북한은 체제의 안위를 핵과 미사일로만 지킬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이 갈망하는 것은 자유와 풍요"라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핵 활동을 재개하며 추가로 핵실험을 한들 이제 더는 국제사회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남과 북이 함께 통일의 길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대화하고 협력하며 교류하는 길뿐이라며 "남북이 서로 믿고 의지하려면 더 늦기 전에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종착역에 대해 북한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함.
- 김 비서관은 "몇몇 나라들이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비대칭위협의 보유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핵물질이나 관련 기술이 민간 테러조직의 손에 넘어갈 경우 그 위험성은 가히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함. 이어 그는 군사력 건설에서 합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합동성 강화는 각 군간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켜 특정임무를 특정군이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과거의 방식보다도 훨씬 유연하고 역동적인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함.
- 김 비서관은 "21세기 군사안보 환경에서는 주력장비 혹은 주력부대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멜레온형' 대응전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우리가 강력한 해양세력이 되어야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와 에너지 자원외교가 힘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한반도 내륙의 물길이 연안바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세계의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음.

○ 日 방위성 "北 미사일 장거리화 진전"(5/14)

-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를 "미사일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검증"이라고 평가하면서 사거리 연장이 이뤄졌다고 분석함. 14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최근 마련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거리는 3천㎞ 이상"이라고 추정함. 아울러 방위성은 이번 실험이 일본을 사거리로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의 명중 정밀도 향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 그러나 이 로켓이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림. 방위성은 이지스함과 정찰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으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경우 북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일부만을 공개함.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방위성은 북한이 지난달 5일 오전 11시30분 액체연료를 사용해 발사한 로켓은 대포동 2호 또는 그 개량형으로 보고 있음. 또 외견상 3단식으로 보이지만 3단의 경우 추진장치가 장착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 1단계 추진체는 오전 11시37분께 아키타(秋田)현 앞 300㎞ 해상에 낙하했고, 2단계 이후는 일본 도후쿠(東北) 지역 상공을 통과해 11시 46분께 북한의 발사 시설에서 3천㎞ 이상 떨어진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방위성은 분석함. 미국 정부는 2단계와 3단계가 분리다고 분석했지만 일본 방위성 보고서는 일본이 확보한 자료로는 분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 러-美, 북핵 문제 협의(5/13)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공전된 북핵 6자회담의 불씨를 살리려는 회담 당사국 간 접촉이 활발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양국 실무자들이 북핵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섬. 성 김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13일 오후(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 6자회담 차석 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한반도 담당 특사를 만나 북핵 문제를 협의함.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양국 북핵 실무자가 한자리에 앉기는 이번이 처음임.
-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만남에서 성 김 특사는 최근 중국, 한국, 일본 등 3개국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6자 회담 재개방안과 관련해 러시아 측의 의견을 청취함. 성 김특사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이들 3개국을 방문함. 특히 성 김 특사는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러시아 등 당사국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6자회담 틀 내에서라면 언제든지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짐. 이에 대해 로그비노프 대표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그비노프 대표는 특히 지난달 2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서 인내와 자제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앞서 로그비노프 대표는 전날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6자회담 프로세스가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라며 지난 4년간 이뤄 놓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무력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확고히 하겠

다는 방식은 비생산적"이라면서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함.

-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지난 10일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우리가 감정이나 절차의 재개에 방해되는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6자회담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이는 다자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당사국 간 지속적 접촉이 중요하며 당사국들이 상황을 악화시킬 만한 행동을 자제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러시아 입장을 재확인한 것임.
-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아·태 담당 차관은 앞서 이타르 타스에 "한반도 문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과 정보 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성 김 특사와는 그동안의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북핵 문제 진전에 어떤 대응 자세가 필요하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우리 측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로켓 발사 이후 전개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양측의 견해를 들어보는 자리였던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라는 대명제에 대해 러시아와 미국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앞으로는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논의들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함. 한편, 일정상의 이유로 이번 6자회담 당사국 순방길에 러시아를 찾지 못한 보즈워스 대표는 내달 초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짐.

○ <北 폐연료봉 재처리 정보 포착안돼>(5/13)

- 북한이 지난달 25일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의 재처리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재처리에 들어갔다고 확신할만한 정보는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영변에 머물렀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불능화 감시요원과 미국의 에너지부 당국자들이 모두 철수한 상황이어서 영변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첩보위성과 핵물질인 크립톤 탐지기를 이용해 북한의 재처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미국의 첩보위성을 통해 영변 상황을 관찰하고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크립톤 탐지기로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핵물질인 크립톤을 감지해 재처리 착수 여부를 판별하고 있는 것임.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아직까지는 재처리 착수를 확신할만한 정보가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외교 소식통은 13일 "첩보위성을 통해 재처리시설 주변으로 트럭이 오가는 것이 포착됐지만 이것이 재처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인지, 실제 재처리 작업을 위한 것인지는 애매하다"고 말함. 이 소식통은 이어 "휴전선 인근에 크립톤 탐지기를 배치해 재처리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잡히는게 없다"면서 "재처리에 들어갔다해도 크립톤 발생이 워낙 소량인데다 바람의 방향에도 영향을 받기때문에 크립톤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서 북한이 재처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다"고 설명함.

- 정부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핵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크립톤 탐지기를 구매, 전방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설사 아직 재처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재처리 착수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음. 이 소식통은 "북한이 재처리에 들어갔다고 한 이후 특별히 변화된 상황이 없는데 북한이 재처리를 보류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함. 폐연료봉 재처리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 북한은 현재 보유중인 폐연료봉 8천개의 재처리를 통해 핵탄두 1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7kg안팎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美 "北 6자회담 복귀가 목표"(5/13)

- 미국 국무부는 12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문제 검토와 관련,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결과적으로 북한 방문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그 목표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함.
- 켈리 대변인은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우리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라면 북한과 직접 대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면서 방북 검토의 목표가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앞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도쿄에서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현지 기자들과 만나 "방북이 미국에 의해 완전히 좌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수 주간에 걸쳐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켈리 대변인은 또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오늘 워싱턴에 돌아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개국 방문 성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함. 그는 켈리 대변인은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아시아 3개국 방문과 관련, "그는 3개국 수도에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고 북한의 핵폐기 문제 진전 방향에 대해 훌륭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함.
- 이와 함께 켈리 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했던 성 김 국무부 대북특사가 13일 모스크바에 도착해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한반도 담당 특사와 만난 뒤 14일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함.

보즈워스 "수주 걸쳐 방북 문제 검토"(5/13)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일 앞으로 수 주간에 걸쳐 자신의 북한 방문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도쿄에서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현지 기자들과 만나 "방북이 미국에 의해 완전히 좌우되는 문

제는 아니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수 주간에 걸쳐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밝힘.

- 또 미 국무부가 전한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회견 녹취록에 따르면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미국에 돌아가면) 유관 부처와 협의를 벌인 뒤 아마도 전화와 기타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해 아시아의 우리 파트너들과 연락을 계속해서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아시아 순방결과를 토대로 미 행정부내 대북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마친 뒤 6자회담 당사국에 그 결과를 전하는 절차를 밟아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짐.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물론 그것은 온전히 북한이 결정할 사안이기는 하다"고 말함.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5개 당사국은 대화와 협상이 현안을 푸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나간다는데 공통된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해 제재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찍음.

"北 협상력 키우려 핵ICBM 추구하는 듯"<美연구원>(5/12)

-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사찰단 추방 등 북한의 도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협상에 기회를 안 주려는 모습을 볼 때 북한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게임을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위원이 12일 주장함. 그는 서울 서초동 평화재단 강당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평화재단과 주한 미대사관 공동 초청 토론회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전략으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춰 더 큰 협상력을 갖고 6자회담에 복귀해 경수로나 중유공급 및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등을 요구하거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철폐,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핵우산 제거 등을 추진하는 새로운 국면을 전개하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봄.
- 북한의 이러한 요구들을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거부하면 "북한은 '잘 됐다'며 그대로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임을 공개 천명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음. 따라서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함께 긴박감을 갖고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짜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북한에 대화와 협상의 문호는 늘 열어놓되 제재를 동원해야 한다"면서 대북 금융제재의 부활을 포함한 다자간 대북 제재의 실시를 촉구함.
- 그는 또 이미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란이 인공위성 기술을 북한

에 전수하면 북한의 ICBM 개발 노력이 미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의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미국이 쿠바나 이란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혁신적 대화 제의"를 했지만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처럼 "악수를 위해 내민 손을 무는 식"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워싱턴에서는 북한에 대해 초기의 낙관론과 달리 비관론이나 회의론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도발행위는 향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화해 조치 가능성을 제약해 버렸다고 강조함.

- 오바마 행정부가 6자회담 외에 다른 형태의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서부터 미국은 양자, 3자, 4자, 6자 등 여러 형태의 회담을 해왔지만 아직 비핵화 문제에 매달리는 형편"이라면서 "다른 형태의 다자회담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이고 정작 문제는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라고 덧붙임.

보즈워스 "6자회담 위기상황 아니다"(5/12)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일 북한이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핵무장 위협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6자회담이 위기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라고 말함. 6자회담 참가국들을 순방중인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제외한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 모두는 현 상황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렇게 밝힘.
- 그는 북한이 향후 실시하겠다고 위협하는 핵실험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임. 대화와 협상만이 현재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다"라며 미국은 6자회담 틀내의 대북 직접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함. 그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대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뒤 나온 것임.

보즈워스, 6자회담 틀 내 북미대화 용의(5/11)

-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을 순방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1일 일본을 방문,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사무차관 등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함. 보즈워스 대표는 일련의 회담에서 "6자회담 틀 내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함.
- 야부나카 차관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나서 "관계국과 원만히 의견을 조정하면서 (북미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고 보즈워스 대표도 공감을 표함.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보즈워스 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일본은 북미대화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다. 사태가 진전된다면 괜찮다"고 북미대화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아울러

그는 북한이 이탈을 선언한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대화와 압력을 조화롭게 병행하면서 6자회담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함.

- 보즈워스 대표는 일련의 회담에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의 결속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또 핵 활동 재개 의사를 밝히는 등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냉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함. 그는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 순방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미국에 돌아간 뒤 각국과의 접촉에서 얻은 정보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협의해 나가면서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 그는 또 "각국이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로 파악해, 공통의 어프로치를 형성해야 한다"고 연대의 중요성도 강조함. 이와 함께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미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함.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미·일 실무자급 협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임. 앞서 보즈워스 대표는 중국과 한국을 방문한 뒤 이날 일본을 찾음. 그는 12일 귀국길에 오름.

나. 미·북 관계

○ 北신문 "美, 대화 원하면 적대정책 바꿔야"(5/17)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7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시 "응분의 대가"를 언급하는 데 대해 "미국의 손탁(손아귀)에 쥐어사는 리명박 패당이 횡설수설한다고 해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단 결심하고 선포한 것을 변경할 우리 공화국(북한)이 아니다"고 주장했음.
- 민주조선은 '미국의 삽살개 노릇이 그리도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현 행정부는 변화와 다무적 협조외교를 표방하면서도 선임 행정부 때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안 하는 것이 우리 공화국"이라고 덧붙였음.
- 이 신문은 "미국의 현 행정부는 이처럼 대화의 간판을 내걸고 그 막 뒤에서 우리나라를 힘으로 압살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고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됨이 없이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음. 신문은 이어 "미국이 진심으로 조미대화를 원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스웨덴 대사, 北억류 美여기자들 면담(5/16)

-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15일 북한에 억류중인 2명의 미국 여기자들을 만났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음.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미국을 대신해 15일 억류중인 2명의 미국인 기자들을 만났다"고 전했음. 그는 "스웨덴 대사는 앞서 3월 30일 이들을 만난 바 있다"고 말했음. 하지만 그는 이번 면담의 내용이나 이들 여기자의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음.
- 북한이 이들 2명의 여기자 면담을 허용한 것은 3월 30일 이후 거의 7주만에 처음. 북한은 3월 말 면담 후 그동안 거듭된 미국과 스웨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허용하지 않았음. 특히 이번 면담은 북한이 전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들 여기자 2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4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뒤 하루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 배경이 주목됨. 북한이 재판 일정을 결정한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이란이 미국적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를 간첩죄로 재판에 넘겨 유죄를 확정한 뒤 석방한 전례를 따르려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는 상황임.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전날 북한이 이들 2명에 대한 재판 일정을 결정한 것은 사태 해결의 신호로 볼 수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북한은 다음달 재판에서 적용될 이들 여기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전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들 여기자에 대해 "불법 입국과 적대 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밝힌 상태임.

美 "北 개성공단 경솔행동 도움안돼"(5/16)

- 미국은 15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기존 계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음.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북한의 이런 경솔한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나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음. 켈리 대변인은 "미국은 모든 당사국들의 이익인 남북한간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 앞서 북한의 개성공단 관할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남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기존 계약의 무효 및 개정절차 착수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음.

"오바마행정부 대북정책 검토 미뤄"<美전문가들>(5/15)

- 한국과 일본 일각에선 오바마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실제론 구체적인 정책이나 전략 마련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오바마 행정부 내부에 정통한

미국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협력안보프로젝트 국장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대북정책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진작 진지하게 정책을 검토했더라면 한반도 상황이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 대사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되기 직전인 지난 2월 그와 함께 방북했던 시걸 국장은 "북한은 가만히 지켜보며 관리만 할 수는 없는 나라"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말고 즉시 정책 검토에 나서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상황이 나아지면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음. 그는 "미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간 양자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진의와 내부 상황에 대한 의구심때문에 미국 정부가 과감하게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일을 망설이고 있다"고 진단함.
- 피터 벡 아메리칸대학 교수도 "북한이 지난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 정부가 계속 오바마 행정부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미국 정부는 더는 북한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북한이 합리적인 자세로 나오거나 중국이 북한의 팔을 비틀어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정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런 식의 방침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고 주장함. 그는 "북한이 이미 로켓을 발사했고 추가로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오바마 행정부가 여전히 대북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세우는 일을 미루고 마냥 방관하는 자세로 있다"고 우려함.
- 부시 행정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무기 사찰단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포토맥 정책연구소에서 활동하는 보수적인 북한 전문가인 데이비드 케이 박사도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검토를 미루고 그저 '선의의 무시' 정책으로 북한을 다루고 있다"고 분석함. 그는 "이런 일시적인 정책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기 원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추가 실험 등의 더 위험한 돌출행동을 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함.
-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이고, 대외적으로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중동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당분간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케이 박사는 전망했다고 RFA는 전함.

"美, 北대비 지상요격미사일 30기 배치"(5/15)

- 미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비해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Ground-based interceptors. GBI)을 30기 배치중인 것으로 14일 밝혀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사일방어(MD)

3단계의 중간 단계인 '미드 코스(mid-course)' 방어 계획과 관련, 30기의 GBI를 현재 보유중에 있음을 확인함.

- 게이츠 장관은 "현재 우리가 보유중인 30기의 요격미사일을 44기로 증가시키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내가 받은 조언은 이 시스템이 정말 북한만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힘.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국방예산을 삭감하면서 44기로 늘리려던 GBI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키로 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하면서 "30기의 요격미사일은 현재와 향후 한동안 가질 수 있는 북한의 능력에 맞는 것"이라고 말함. 그는 "이 점에서 30기의 요격 미사일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 하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지상요격 미사일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음. 미국이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이 순전히 북한을 겨냥한 것임을 확인한 것은 처음임. 게이츠 장관은 이어 미사일방어 단계 중 적국이 미사일을 발사한 초기에 요격하는 '부스트(boost) 단계'의 요격이 가장 어렵다면서 항공기를 통한 레이저 공격체계(Airborne laser.ABL)의 사용이 쉽지 않음을 설명함.
- 그는 또 북한이나 이란의 미사일 발사시 초기 발사 단계에서 요격하려할 경우 이들의 국경 내로 진입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작전적으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고 가능성을 낮게 봄. 게이츠 장관은 이밖에 대기권을 진입했던 적 미사일을 최종 단계에서 격추한다는 고고도방어체계(THAAD) 계획과 관련, 미사일방어 능력을 갖춘 6기의 이지스함을 새로 증강할 계획임을 밝힘.
- 이와 관련, 그는 "최종단계(terminal phase)의 예산은 증강했다"면서 최종단계의 미사일 요격 체계는 꽤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미국은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된 탄도탄이 30~40km 상승단계에서는 항공기에 탑재된 레이저로 요격하고 고도 100km의 대기권을 돌파하는 중간단계에서는 이지스함의 SM-3와 지상배치 요격미사일로 저지하는 미사일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음. 또 포물선을 그리며 나는 탄도탄이 마지막 비행단계에서 고도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THAAD를 통해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계획임.

◎ 北, 美여기자들 6월4일 재판(5/14)

-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한 재판이 내달 4일 열릴 것이라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밝힘. 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해당기관의 기소에 따라 6월4일 미국기자들을 재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적용 혐의나 두 여기자의 상태 등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음.
- 중앙통신은 그러나 지난 3월31일 두 여기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중간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밝힘. 미국의 '커런트TV' 소

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3월17일 북·중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억류됨.

- 북한은 지난달 24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해당 기관은 미국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결속했다"며 "해당기관은 확정된 미국 기자들의 범죄자료에 기초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혀 기소 방침을 분명히 했었음. 미국 여기자들이 받고 있는 '적대행위' 혐의는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 적대죄'로 추정되며, 이 죄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해당하지만 "정상이 무거운 경우"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짐. 또 '불법입국' 혐의의 경우 북한 형법상 '비법국경출입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죄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을 받지만 역시 "정상이 무거운 경우"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으로 형량이 높아짐.
- 미국 정부는 자국 여기자들이 북한에서 체포된 직후부터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들의 상황을 파악해 왔으나 지난 3월30일부터는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의 여기자 접견마저도 차단되고 있음.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영사접근조차 불허하는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주도와 북한 사업체들에 대한 제재조치에 강력 반발,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핵문제 진전과 이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 등 큰 계기가 없이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자 2명이 쉽게 석방되기 어려울 전망임. 이에 따라 미국내에선 여기자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이 소속된 커런트TV 창립자인 엘 고어 전 부통령을 특사로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미 의회조사국 래리 닉시 박사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여기자들을 재판에 넘겨 유죄를 인정하도록 한 뒤 석방할 것"이라며 "최근 이란의 경우처럼 이런 절차가 시나리오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봄. 이란 법정에서 간첩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이란계 미국인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씨는 지난 11일 수감 석달여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남.

美, 대북지원 95년來 12억8천만달러(5/14)

- 미국이 북한에 대해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총 12억8천585만달러(한화 1조5천982억원 상당) 규모의 각종 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13일 나타남.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본격 시작돼 올해 초까지 식량, 에너지, 의약품을 포함한 각종 생필품 지원이 이뤄짐. 이중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이 총 225만8천164t(7억675만달러 상당)에 달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 식량 지원은 지난 3월 북한이 구호단체에 대해 떠날 것을 요구하기 전까지 계속됐고, 올해 회계연도(2008년 10월부터 시작)에도 2만1천t의 식량 지원이 이뤄짐. 또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에서 북한으로 1억4천600만달러 상당의 중유가 지원됐고, 북한의 비핵화 합의 이행을 위해 별도로 2천만달러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작업에 필요한 기술 및 관련 경비를 제공해 옴. 이 밖에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비용으로 95년 이후 4억370만달러가 집행됐고, 의약품 등 기타 생필품 대북 지원에 940만달러가 투입됨. 연도별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 회계연도의 경우 미국의 대북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 다시 재개돼 2008 회계연도에는 1억9천970만달러의 지원이 이뤄짐. 한편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비핵화 작업에 대한 반대급부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제공키로 한 100만t의 대북 에너지 및 설비 지원 사업에 따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지금까지 총 50만t의 중유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중유 19만t 규모에 상응하는 설비 등도 지원됨.
- 하지만 일본이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할당분(20만t)의 지원을 시작도 안했고, 지난해 12월 북핵 검증합의서 채택 실패에 따라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5만5천t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등 나머지 31만t 규모의 지원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됨.

○ <美전문가들이 보는 北 김정운후계 구도>(5/13)

- 미국의 북한전문가들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운의 후계자 내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실제 정운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느냐는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방송은 "미국 전문가들은 과거에 정운씨가 나이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탓에 그의 승계 문제는 불투명하다고 무시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며 켄 코스 해군분석센터연구소 해외지도자 연구이사 등의 견해를 소개함.
- 그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 언론을 분석해보면 북한 지도부가 평양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엘리트 집단을 대상으로 김정운이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결정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인상을 받는다"며 "적어도 후계자와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엘리트 집단은 이를 알고 있다고 보지만 일반 주민은 아직 모르고 있다"고 말함.
-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도 고스 이사의 진단에 동의하면서 '150일 전투'와 5.1절 기념행사 등은 "모두 정운이 후계자로서 업적 쌓기에 나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함. 이들은 그러나 앞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건재 기간과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향후 역할을 꼽았음.

- 고스 이사는 “여러 소식통을 통해 김 위원장의 와병 이후 장 부장이 각별한 관계인 김 위원장의 장남 정남을 버리고 삼남인 정운을 지지하는 대신 권력의 핵심 요직에 장 부장의 사람들을 임명하고, 장 부장의 권력이 커져도 그를 숙청하지 않겠다는 밀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김 위원장의 사후에도 이 밀약이 과연 지켜질지 의문이 든다”고 말함. 그는 김 위원장 사후 “과연 장성택 부장이 가만히 앉아서 정운이 서서히 권력을 장악하도록 내버려둘지, 아니면 김정운 체제를 뒤엎을지, 혹은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지, 아니면 집단 지도체제 안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날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함.
- 닉시 박사는 “최근 김 위원장이 북한의 제2인자라 할 수 있는 장 부장을 비롯해 소위 ‘오래된 김정일의 사람들’을 국방위원회에 합류시킨 이유는 정운의 입지를 굳게 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김 위원장 자신이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함. 그는 “올해 25세로 직접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연소하고 경험과 경력도 짧은 정운이 김 위원장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린다”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김 위원장이 당장 2~3년 안에 사망할 경우, 북한의 최고 통치자로서 정운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덧붙였음.

○ <美조야 대북 해법 ‘백가쟁명’>(5/13)

- 미국이 향후 대북 대응 기조를 어떻게 둘지를 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짐. 과감한 양보를 통해서라도 즉각 대북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의 위협에 항복하는 식의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음. 여기에 대북 봉쇄를 강화하고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아시아 순방을 마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앞으로 수 주간에 걸쳐 자신의 북한 방문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가운데 오바마 정부가 어떤 대응 카드를 선택할지 주목됨.

◇ 호의적 무시..“냉정히 대응” = 대화는 필요하지만 일단 북한의 위협에 일일이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지켜보자는 ‘호의적 무시(benign neglect)’ 주장이 현재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외교 소식통은 12일 “북한의 위협을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전함.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낸 미첼 리스 윌리엄 앤드 메리대 교수,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등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위협하는 북한이 모든 카드를 다 소진할 경우 언젠가는 대화의 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한몫을 하고 있음. 이들은 다자 협상의 틀을 재건하기 위한 의도 하의 양자 접촉 재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너무 성급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 프리처드 소장은 이날 내셔널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의 모든 허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절제된 정책을 계속 펼쳐야 한다"면서 "수십년간의 불행했던 '쫓기(chasing after)'식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말함. 다만 상황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성은 인정함. 그는 뉴욕 필하모닉의 지난해 북한 공연에 이은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그는 "오바마 정부는 단기적으로 직접적이지 않은 대북개입과 수정된 호의적 무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함.

◇ 즉각 협상.."무시정책은 실패" = 무시정책은 부시 행정부 때 실패로 결론난 정책이라면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북협상 착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음.

- 오바마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 소장,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국장 등이 이런 목소리를 이끌고 있음. 이들은 "지금은 미국이 의미있는 협상을 복원하는 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기"라면서 북한의 최고지도부가 협상을 완전히 포기키로 결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함. 이런 측면에서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조 바이든 부통령 등 고위급 대북특사를 파견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 조엘 위트 전 북한담당관은 이날 내셔널저널 기고에서 "더욱 더 과감한 것이 더 좋은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미국의 목표를 진전시켜 주기만 한다면 북한과 최고위 당국자를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접촉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외교당국간 대화 외에 북한과 군사당국간 대화도 시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함.

◇ 대북 제재·압박 강화 =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를 주장하는 강경파들도 있음.

- 보니 글레이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내셔널저널 기고를 통해 "미국이 영변을 지금까지 세 번 샀다"면서 "빈껍데기 대화를 위해 나쁜 행동에 보상할 수 없다"고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함.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의 제임스 캐러파노(James Carafano) 선임연구원은 "6자회담에 실패한 뒤에 무엇을 할지 플랜 B 작업에 착수할 시기"라면서 "북한에 대한 좀 더 강한 봉쇄도 해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함.

- 강경파들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 중국의 PSI 참여, 대북식량지원 중단 등의 카드도 거론하고 있음.

"北, 교향악단 미국공연 계속 추진 요청"<VOA>(5/12)

- 미국 뉴욕의 북한대표부 관계자들이 최근 프레드 캐리어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을 계속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캐리어 부회장이 1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힘.
- 캐리어 부회장은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이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반발해 또 다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는 등 정치적 기류가 악화됐다"며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은 악단 관계자 뿐 아니라 (북한) 정부 고위 관리들의 방문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 등 여러 면에서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은 "가능성이 반반이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그는 말함. 그는 다만 "북한측이 변화 여부에 관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과 동일한 수준의 관심과 영향력을 가진 행사는 현재의 미·북간 정치환경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 성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냄. 조선국립교향악단은 뉴욕 필하모닉교향악단의 작년 2월 평양 공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뉴욕 공연을 추진해 옴.

"北, 美여기자 억류 계획적 행동 가능성"<日紙>(5/12)

- 북한과 중국간 접경지역에서 북한이 취재 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을 체포한 사건은 북한의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가 사전에 국경 부근에 대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1일 보도함. 신문은 베이징(北京)에 있는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중국 당국의 증언을 토대로 "여기자에 대한 안내역을 맡은 중국 조선족 가이드가 중국 공안에 자신이 북한의 협력자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한국측은 지나친 취재활동이 원인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정밀히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기자를 구속한 곳은 국가안전보위부 부원이었다"며 "체포 현장 부근에는 국가안전보위부 부원과 병사를 포함해 5명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음. 다른 대북 소식통도 "북한측이 사전에 미국 기자들의 현지 취재 정보를 입수하고 협력자에게 국경 부근으로 유도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美의회, 北우라늄농축 지원금지법 발의(5/12)

- 북한과 이란, 시리아로에 대한 우라늄 농축 시설, 기술 지원을 금지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11일 확인됨.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소위 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6일 '2009 국제 우라늄 추출 및 가공통제법안'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함.

-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과 에드 로이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우라늄 추출 및 가공과 관련된 기술이나 물품, 서비스를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제공하는 것을 미 정부가 반대토록 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이 같은 국제적 기술 이전 등이 이뤄질 경우 미 정부가 제재를 가하도록 명문화함.
- 이번 법안 발의는 북한이 지난달 말 추가 핵실험과 함께 우라늄 농축 등에 나서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가운데 나온 것임. 이와 관련, 법안은 북한에 존재하는 상당량의 우라늄 원석은 다른 나라들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또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국내 우라늄 자원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물품 등을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의 중요한 비확산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법안은 다른 핵물질 및 시설들과는 달리 우라늄을 농축, 가공해서 옐로케이크(정제과정을 거친 우라늄)을 만드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대상이 아니라서 감시가 허술하다는 점도 지적함.

美국방 "北, 전쟁간주 위협은 수사"(5/12)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남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방침을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위협발언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밝힘. 게이츠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최근 몇주에 걸쳐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수사들에 대해 솔직히 놀랍고 혼란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힘.
- 그는 "북한은 이런 식의 수사를 통해 전보다 더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해왔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PSI 참여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내가 생각하기로는 수사로 본다"고 말함.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의 PSI 참여방침과 관련해 이뤄진 북한의 주장을 '수사'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의미자체를 평가절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적인 발언이나 북핵 6자회담 복귀거부, 핵개발 재개 움직임 등 협상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려는 북한의 벼랑끝 외교에 미 행정부가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짐.

롬니 "오바마, 북한·이란에 약해"(5/12)

-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선 기대주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는 1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 문제를 다루는데 유약해 보인다고 비판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보도함. 롬니 전 주지사는 지지자들에게 보낸 '오바마의 약한 외교정책'이라는 제목의 e-메일에서 "북한의 김정일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확산의 위험에 대해 연설하는 바로 그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함.

- 그는 또 "최근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성공적으로 습득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이란이 서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그는 "이들 두 경우 모두 세계 평화와 안전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난함. 그는 오바마의 임기가 아직 매우 초반부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좀 더 강력한 외교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힘.
- 지난해 공화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도하차했던 롬니 전 주지사는 최근 공화당 내 한 여론조사에서 20%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차기 대선의 유망한 기대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임.

"김정일 와병후 北 더 호전적"<WSJ>(5/11)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 이후 군부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미국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으며, 이는 두 명의 미 국적 여기자와 한국인 한명의 북한 구금 상태와도 무관치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함. 신문은 중국 국경지대에서 취재중 체포된 유나리, 로라링 두 여기자와 개성공단에서 일하다 '체제 비판' 혐의로 체포된 유모씨의 구금은 김정일 와병 이후 점차 호전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 6자회담 철수, 국제 무기 사찰단 추방에 이어 추가 핵실험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함.
- WSJ은 "북한의 외국인 구금행태는 자국인 외교관의 접견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 인권관행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은 거의 두 달동안 두 여기자와 유씨로 알려진 한국인에 대한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북한측은 두 여기자를 '적대행위'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국은 물론 북한내 미국의 연락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스웨덴 대사관에도 재판 진행 일정 등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매츠 포이어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는 지난 3월 30일 이들 여기자를 한 차례 만났을 뿐 이후 추가 면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전함.
- 미국 관리들은 이란에 감금돼 있는 여기자 문제와는 달리, 북한에 감금돼 있는 두 여기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양과의 협상에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초라고 분석함. 신문은 북·미 상황에 정통한 한 인사의 말을 인용, 북한이 미국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정일 와병 이후 북한 군부 강경파들이 득세해 핵무기 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외교적 과정들을 단절시키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함.

- 김정일 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을 만나지 않은 것도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단적인 예라는 것.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 외교부장을 만나 6자회담을 촉구함. 평양의 한 관리는 지난주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에 대해 "전임자인 조지 부시 대통령과 다를 바 없는 호전적인 자세"라고 주장하면서 북·미 양자대화에도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음.

다. 중·북 관계

○ <北 6자회담 거부에도 北中교류 활기>(5/13)

-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고 핵실험을 언급하는 등 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무관하게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중국이 양국의 수교 60주년과 '북·중 우호의 해'를 맞아 최근 대규모 무역 및 기업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무역박람회에 참여하고 양국 고위층간의 접촉도 활발해지고 있음.
-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대표단은 12일 평양에서 열린 제1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중국관의 날' 연회에 참석해 양국간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고 보도함. 왕진전(王錦珍)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은 "중국 기업들은 북한과 가공무역과 보상무역, 자원개발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함. 오룡철 북한 무역성 부상도 "매년 열리는 이번 행사가 양국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다"면서 "북한은 중국과 경제와 무역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함.
- 지난 11일 평양에서 개막해 4일간 열리는 전람회에는 중국 기업 140개를 포함해 19개 국가 22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음.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접촉도 강화되고 있음.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조·중 친선도시대회'에 참가한 우둥허(武東和) 중·조 우호협회 회장 등 대표단과 중국 지방정부 대표단들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다짐함.
- 문재철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도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에서 열린 북·중 친선도시대회에서 우둥허 회장과 지방정부 대표단과 만나 양국 도시들간 결연을 늘려나갈 것을 다짐함. 이같은 분위기는 북한이 로켓 발사 실험 이후 6자회담 탈퇴를 선언하고 추가 핵실험을 언급하는 것과 무관하게 북한과 중국의 경제·무역 교류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방문단의 방북은 올해 활발하게 추진되는 ‘북·중 교류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북한의 6자회담 탈퇴 선언 등 정치적 문제와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말함.

中 옌볜자치주 안투현 북한 변경관광 허용(5/12)

-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의 단둥과 투먼에 이어 옌볜자치주 안투현도 북한 변경관광이 허용됨. 중국 당국은 6월부터 안투현과 북한 삼지연을 연결하는 쌍목봉 관광통상구를 개통, 중국인들이 북한 변경 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흑룡강신문이 12일 보도함.
- 안투현은 창바이산(백두산) 주봉 및 천지와 20㎞ 거리에 있고 삼지연과도 불과 35㎞ 떨어져 있으며 쌍목봉 통로는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 통로로서 이번 변경관광 허용으로 중국 관광객들은 비자 발급없이 북한쪽 백두산을 관광할 수 있게 됨. 창바이산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라 안투현과 삼지연은 지난해 창바이산 관광자원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쌍목봉 관광통상구를 개통키로 합의함.
-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달 랴오닝성 단둥에 대해 변경 관광 허용, 중국인들이 번거로운 비자 발급 절차 없이 북한 신의주 일대를 관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달부터는 청진과 투먼을 오가는 관광열차를 운행키로 결정함.

라. 기타

“北국제상품전람회서 호주산 쇠고기 홍보”(5/16)

- 제1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5.11-14)에서는 중국산 냉·온풍기와 호주산 쇠고기, 북한산 수산물가공품 등이 인기를 끌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6일 보도. 신문은 이번 전람회에서 많은 중국기업의 참가속에 중국 광둥성 주하이(珠海)시의 냉·온풍기 생산업체인 ‘중국주해그리전자주식유한공사’가 이목을 끌었다며 수년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하이시 방문 때 참관한 이 업체가 “이번 전람회 참가를 계기로 앞으로 합작 또는 기술교류 등의 형태로 조선의 기업들과 적극적인 경제교류를 실현해 나갈 기대와 희망을 표시했다”고 전했음. 공사는 이번 전람회에 냉·온풍기 외에도 선풍기, 제습기, 가습기 등의 제품들을 내놓았음.
- 호주 교포인 동서무역회사의 이웅기(57) 사장은 5회째 전람회에 쇠고기를 출품했음.
- 이 사장은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호주산 쇠고기를 출품”했다며 전람회에는 맛좋고 만문한(육질이 부드러운) 호주산 쇠고기제품의 광고판도 세워지고 호주산 쇠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시식회도 가졌다고 자랑했음.
- 또 북한 업체 중에서 처음 전람회에 참가한 수채봉수출수산합작회

사는 동해산 수산물 가공제품들을 출품해 호평을 받았으며 "제품거래를 요구하는 회사들의 상담, 면담 요청이 쉴 새 없이 들어왔다"고 동기명(42) 사장의 말을 인용해 신문은 전했음.

○ 北-브라질 외무장관 회담(5/13)

- 북한 박의춘 외무상과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이 브라질리아에서 회담을 갖고 통상 확대를 포함한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했다고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함. 박 외무상은 전날 브라질리아에서 아모링 장관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통상 확대 외에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및 핵개발 계획, 인권 문제 등도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함.
- 신문은 이어 아모링 장관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조성된 남북한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음. 박 외무상의 방문은 브라질이 지난해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한 뒤 처음 이루어진 것임.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관은 오는 29일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초대 대사에는 아르날도 카힐료가 임명됨.
- 브라질 외무부 관계자는 "박 외무상이 석유와 광물 자원 분야에서 브라질 기업의 투자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공동으로 심해유전 개발을 추진하는데 관심을 나타냈다"고 말함. 이에 대해 아모링 장관은 브라질산 농기계와 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의 대(對) 북한 수출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브라질의 대북 수출은 지난 2007~2008년 사이 106% 증가했으나 전체 교역액은 3억8천100만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음. 브라질은 남미에서 쿠바에 이은 2번째 대북 수교국으로 2001년 3월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북한은 2005년 브라질리아에 대사관을 개설함.
- 한편 아모링 장관은 박 외무상으로부터 북한 공식 방문을 요청받았으며, 내년 중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北 '非서방국들'과는 교류 활발>(5/12)

- 북한이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해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비서방' 국가들과는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 우선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순방에 나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9일 열린 제이콥 주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함. 이 취임식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참석, 김 상임위원장과 면담 가능성을 모색했으나 결국 불발함.
- 김 상임위원장은 남아공 방문에 앞서 싱가포르에 들러 셀레판 라마나단 대통령과 회담했으며 남아공을 거쳐 짐바브웨를 공식방문할 예정임. 그의 순방에는 리룡남 무역상, 김형준 외무성 부상 등이 수행해 이들 나라와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을 내비쳐짐. 이에

앞서 지난달 하순 북한 박의춘 외무상도 쿠바의 아바나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각료급회의 참석을 위해 쿠바를 방문한 후 이달 초순엔 페루를 거쳐 10-12일 브라질을 방문함.

- 그는 쿠바 방문기간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외교부간 협조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페루에서는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호세 안토니오 가르시아 페루 외무장관과 회담, 양국간 친선관계 확대와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박 외무상의 마지막 순방국인 브라질은 남미에서 쿠바에 이은 2번째 대북 수교국으로 2001년 3월 외교관계를 맺음.
- 지난달 하순에는 또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대장)을 단장으로 한 '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과 심철호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체신성 대표단이 각각 베트남을 방문하기도 함. 또 켐보 캄프벨 두기쉬모하디 짐바브웨 내무장관과 우 마웅 민 미얀마 외교차관이 11일 각각 평양을 방문함. 북한은 1980년 4월 짐바브웨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상호교류를 통해 친선관계를 강화해 오고 있음. 지난해 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의 축출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은 무가베가 사라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데 대해 "엄중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무가베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었음.
- 수교 60주년 행사를 갖고 있는 북·중간에도 교류가 활발함. 북한 노동신문 대표단이 9일 중국 방문에 나섰으며, '북·중 친선도시대회'에 참가할 우둥허(武東和) 회장을 단장으로 한 중·조 우호협회 대표단과 중국 지방정부 대표단, 차오지엔린(曹健林)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과학기술부 대표단이 각각 방북함.
-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도 지난달 23~24일 평양을 방문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박의춘 외무상과 회담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은 이뤄지지 않음. 한편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12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를 위해 중국,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폴란드 등에서 200여개 회사와 단체들이 평양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韓파병부대에 테러정보 실시간 제공"(5/17)**

- 미국이 위성과 생체정보 수집수단 등을 통해 확보한 테러관련 정보를 한국군 해외 파병부대에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을 우리 군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군의 한 소식통은 17일 미국은 국립지리정보원(NGA)이 확보한 테러지역 정세 정보와 국방정보국(DIA),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테러범과 테러집단 동향 첩보 등을 한국군에 실시간 제공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를 위해 한.미 군당국은 최근 정보제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음. 소식통은 "MOU가 체결된 이후 제공되는 테러관련 첩보는 청해부대와 동명부대 등 우리 군 파병부대에 일차적으로 전달될 것"이라며 "특히 미 DIA 소속 요원을 우리 파병부대에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음. 그는 "청해부대의 경우 링스헬기 한대를 출동시켜 해적선을 퇴치하고 있으나 작전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드넓은 해상에 어떤 위해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퇴치작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의 테러정보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음.
- 다른 소식통은 "청해부대 소속 문무대왕함이 활동하고 있는 인근 예멘으로 알 카에다 등 테러세력이 속속 집결하고 있으며 미국산 무기를 다량 구매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면서 "소말리아 해상을 주무대로 하는 테러집단 뿐아니라 중동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테러세력의 동향도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한.미간 정보교환 협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음.
- 미국 NGA는 전 세계 테러 위험지역 뿐아니라 테러범의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은신처로 추정되는 건물에 몇명이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또 미국 정보기관은 생체정보 인식 카메라에 테러범이 포착되면 그의 신장과 몸무게, 건강상태 등 신체적 특징을 고스란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韓·美통상장관 "FTA 반드시 성사 공동인식"(5/15)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 워싱턴 DC에서 첫 한·미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는 상견례를 겸한 이날 회담에서 양국의 의회 비준동의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의 진전방안에 관해 집중적인 의견교환을 했으며, 양국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한·미 FTA가 조속히 결실을 봐야 한다는 데 공감함. 김 본부장은 이날 주미한국대사관 코러스 하우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커크 대표도 무역이 주는 혜택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신념과 평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특히 그는 앞으로의 협상과 관련, "협정문을 건드리거나 다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본다"고 말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한·미FTA의 비준 시기에 대해서 김 본부장은 "연내 비준이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정상차원에서 만나는 계기가 많이 있어 좋은 모멘텀과 찬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함. 김 본부장과 현재 협상 중인 유럽연합(EU)과의 FTA와 한·미FTA 처리는 되는 순서대로 먼저 하면 된다면서 어느 쪽이 먼저 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김 본부장은 또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등에 대해 언급이 없었고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함. 그는 또 "만약 미국의 앞으로 요구가 균형과 잠재적 혜택, 이익면에서 기우는 성질이라면 균형을 당연히 맞춰야 한다"며 미국의 요구 수준에 따라 앞으로 협상에서 우리의 요구도 달라질 수 있다고 시사함.
- 앞서 김 본부장은 회담후 USTR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공동인식을 도출했다"면서 "여러가지 사정이 있지만 좋은 기회를 찾아 가급적 빨리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 서로 동의했다"고 말함. 김 본부장은 자동차와 쇠고기 등 현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재협상과 추가협상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함.
- 그는 또 앞으로 협상과 관련, "올해도 서너 차례 더 만날 계기가 있을 것"이라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 때 양자접촉을 할 수 있는 계기 등을 통해 충분히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커크 대표는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 FTA에 대해 현재까지 상황을 검토하고 우려 사항들과 관련해 의회와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논의해 나갈지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커크 대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FTA를 가장 효과적으로 진전시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한미 양국은 국제적인 무역개방에 중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도하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한국과 돈독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음.

DJ-클린턴 前미대통령 18일 회동(5/15)

-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오는 18일 제3차 'C40 서울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함. 김 전 대통령측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만남이 이뤄지게 됐으며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6자회담 등 북핵해법과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재임시절이 겹쳤던 두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햇볕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대북 문제에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함. 두 사람의 만남은 김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지난 2007년 9월 클린턴

재단 주최로 열린 CGI(Clinton Global Initiative) 연례회의에서 면담을 가진 이래 20개월 만임.

- 클린턴 전 대통령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방한시 김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면담 희망 의사를 밝힌 바 있음. 앞서 김 전 대통령은 2월 클린턴 미 국무장관, 지난 9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 정부의 유력 인사들과 연쇄접촉을 갖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한-미SPI회의 워싱턴 개최..파병논의 주목(5/14)

-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14일 워싱턴에서 제22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양국 간 군사현안을 점검함. 양측은 회의에서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 전환키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전환 이후 합참과 미 한국사령부(US KORCOM) 사이에 신설키로 한 동맹군사협조단과 전구(戰區)급 기능별 군사협조기구 등에 대한 세부협의를 벌일 것으로 보임. 또 막바지 합의단계에 이른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과 시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에 대해 양측간 의견 교환이 있을지 주목됨. 미측은 최근 한국의 공병부대를 아프간에 파병해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짐. 이번 회의는 15일까지 열리며 한국에서는 김상기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세드니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대표로 참석함.

美국방부 "전작권 2012년 전환 변함없다"(5/12)

-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2012년 전환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밝힘.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지난 4~8일 워싱턴을 방문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월터 샤프 사령관, 이성출 부사령관과 전작권 전환에 대한 토의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변함없이 확고할 것이며, 전작권은 계획대로 2012년에 전환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연합사 측이 12일 전함.
- 샤프 사령관과 이 부사령관의 이번 방미는 미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한미동맹 현안을 설명하면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연합사 측은 설명함. 연합사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함께 미국 주요 인사를 예방해 한미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샤프 사령관의 제안으로 이뤄짐. 샤프 사령관과 이 부사령관은 방미기간 국방부를 방문해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차장과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중부사령관 등 정책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 주요 군사현안을 논의함.

○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 하나원 방문(5/11)**

- 에리카 펠러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가 11일 오후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했다고 통일부가 밝힘. 펠러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을 둘러보고 우리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과 탈북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펠러 고등판무관보는 이 자리에서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 경로와 어려움을 이해하는 유익하고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 UNHCR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우리 정부는 국제적으로 난민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탈북자 문제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펠러 판무관보는 UNHCR의 세번째 고위인사로 지금까지 하나원을 방문한 UNHCR 최고위 간부인 것으로 전해짐.
- UNHCR 관계자가 하나원을 방문한 것은 2007년 12월 파스칼 모로우 UNHCR 제네바본부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수석정책관과 비라통 봉바로타이 UNHCR 중국대표부 대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음. 매년 국내로 들어오는 전체 탈북자 가운데 약 1%가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UNHCR의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0일 한국을 찾은 펠러 판무관보는 12일 오 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천해성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등과 면담한 뒤 다음 행선지인 일본으로 향함.

나. 한·중 관계

○ **<韓中 이어도 영유권 분쟁 불붙나>(5/13)**

- 우리나라가 실효지배 중인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12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에 제출함. 이에 따라 중국이 또다시 이어도를 한·중 양국의 200해리 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국의 대륙붕 경계선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마감시한인 13일을 앞두고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함.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 제출은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CLCS에 대륙붕 경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른 것임. 주중 한국대사관 당국자는 "중국은 지난 11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에 제출했다"면서 "중국이 제출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함.

- 이와 관련,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에 제출한 정보는 200해리 바깥 동중국해 일부 지역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함.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07년12월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에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岩礁>)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가 외교문제로 비화되자 삭제한 바 있음.
- 중국은 "이어도는 동중국해 대륙붕 위에 있는 중국 대륙 해저의 일부분이며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수역내에 있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최신 지도에도 자국 해역에 표시하고 있음.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은 지난 2006년 이어도가 수중암초로서 영토문제가 아닌 해양경계 획정 문제라는데 합의한 바 있어 영토분쟁은 없다"고 말함. 그는 "다만 이어도가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양국간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중간선을 그으면 우리나라 쪽에 들어온다"고 강조함.
- 우리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50㎞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 기점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직선으로 287㎞나 떨어져 있음. 중국은 또 동중국해상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는 아시아 9개국 및 대만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음. 마 대변인은 남중국해 해양 경계선과 관련,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해 확고한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우리는 다른 나라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경계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함.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해양 경계선 획정 문제와 무인도를 쟁탈하기 위한 치열한 주권 확보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임. 한편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월 말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를 신설하고 주한 중국대사를 지낸 닝푸쿠이(寧賦魁)를 사장(국장)에 임명함.

○ 박대원 KOICA총재 中과 사막화 방지 논의(5/12)

-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재는 12일 중국 임업국 초청으로 방중, 자즈방(賈治邦) 국장(장관급)과 한-중 산림녹화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박 총재는 이날 베이징(北京)의 중식당 장성반점(張成飯店)에서 중국 임업국 측이 주최한 만찬에서 "재임 중에 중국 측과 손잡고 황사를 멈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국은 경제가 발전했고 외국에 원조를 주는 나라이어서 KOICA의 무상 원조 대상국이 될 수 없지만 중국의 환경 문제는 곧바로 한국의 문제인만큼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박 총재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제창한 이후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 국가와 환경 협력을 위해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면서 "이번 방중은 중국 내륙과 내몽골 지역의 식수와 조림사업을 함께 벌여 양국을 이롭게 하는 프로젝트를 보고 싶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임. 자 국장은 "총재의 방중은 중-한 임업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 간의 우의를 긴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하느님이 불공평하게도 중국 국토 면적의 상당 부분을 사막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함. 그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사막화 방지를 지원하는 것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이로운 것"이라고 덧붙임.

다. 미·중 관계

○ 中-美 해상대치 피할 완충책 모색(5/16)

- 중국과 미국은 최근 양국 함정들이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대치한 사건을 중시, 해양주권에 대한 국제법 해석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5일 보도.
-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소식통은 우성리(吳勝利) 중국 해군사령관이 지난 4월23일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60주년을 맞아 거행된 해상 열병식에 참가하기 위해 칭다오(青島)를 방문한 게리 러프헤드 미 해군 작전사령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양국 함정 대치사건에 대해 솔직한 견해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음. 이 소식통은 중.미 양국 해군 간에 국제 해양법에 대한 의견차이가 여전했지만 해결책을 찾도록 상호 노력을 계속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음.
-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 해군이 서태평양에서 간첩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미간에 해상에서 화해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음.
- 중국 현대국제연구소 위안 펑 교수는 "미국은 아시아에서 군사적인 방법으로 영향력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해온 미국이 이제 작전 무대를 남중국해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미국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대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남중국해상에서 벌어지는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중국과 미국은 지난 3월9일 남중국해에서 해양관측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임페커블호의 관측활동을 둘러싸고 양국 함정이 대치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서해의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 두 척이 미 해양관측선 빅토리어스호에 접근, 긴장이 고조됐음.

○ 美 "中 천안문사태 지도자체포에 실망"(5/14)

- 미국 국무부는 13일 중국이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 지도자 1명을 체포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의 인권운동가인 저우용준(周勇軍)이 수개월 동안 중국에서 억류된 뒤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중국의 법적 절차에 반해 저우 가족들은 뒤늦게 오늘에야 이 사실을 공식적인 통보 받았다"고 말함.

- 켈리 대변인은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도 중국 외교부에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에 그에 대한 모든 법적, 행정적 결정이 중국 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함. 톈안먼 사태 당시 중국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던 저우는 현재 미국 영주권자 신분임. 저우는 1993년 미국으로 건너와 영주권을 획득했으며 지난 1998년 중국 입국을 시도하다 중국의 법원으로부터 3년의 노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저우는 또 지난해 9월 홍콩을 통해 중국 본토 입국을 다시 시도하다 공안에 적발돼 구금당한 이후 최근 수이닝시로 옮겨짐.

○ 가이트너, 내달초 첫 중국 방문(5/13)

-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6월 1일과 2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중국측과 고위급 경제대화를 갖는다고 미 재무부가 12일 밝힘. 가이트너 장관의 방중은 취임 후 처음 이뤄지는 것임.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이트너 장관이 중국 고위관리들을 만나 미·중 양국의 중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은 안정적이며 균형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문제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이에 따라 미국이 대중 무역역조 문제와 관련, 중국 위안화의 환율 조정 문제를 이번에 주요 의제로 제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가이트너 장관은 올해초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가 미국 무역적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라. 미·일 관계

○ 美, 이달 日.괌에 F-22 24대 전진배치(5/14)

- 북한이 핵재처리에 착수하고 2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실험을 언급한 가운데 미군이 이달 중 F-22(일명 랩터) 2개 비행대대를 일본과 괌에 전진배치시킬 계획인 것으로 14일 확인됨. 특히 미국이 최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한 가운데 미군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첨단,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전진배치키로 해 주목됨.
- 외교소식통은 "미군이 이달 중에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F-22 12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도 F-22 12대를 각각 배치, 향후 4개월동안 작전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2개

F-22 대대 전진배치로 정비·무장병력 등 500여명도 함께 이동하게 된다"고 말함. 이번에 가데나 기지에 배치되는 F-22는 버지니아주 랭리공군기지에 있는 제94전투비행대대 소속이며, 앤더슨 기지에 배치되는 F-22는 알래스카주 엘먼도프공군기지의 제525전투비행대대 소속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함.

- 서울의 군사소식통은 "미군이 올해초 F-22 대대들을 전진배치했다가 귀환시킨 지 한 달도 안돼 또다시 2개 F-22 대대를 태평양에 배치키로 한 것은 최근 동북아 정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함. 미군은 지난 1월부터 일본 가데나 기지에 F-22 12대를, 앤더슨 기지에 F-22 14대를 전진 배치했다가 지난달 중순 모두 복귀시킴.
- 북한은 지난 4월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판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불능화했던 영변핵시설을 원상복구, 재가동에 나섰으며 2차핵실험 및 ICBM추가 발사실험 가능성도 언급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최근 6자회담 참가국들을 순방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8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F-22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첨단 전투기로 F-15, F-16 등 미군이 운용하는 전투기들과 공중전투 시뮬레이션 결과 '144 대 0'으로 승리한 세계 최강의 전투기, '꿈의 전투기'로 불림. 날개 길이 13m, 길이 18.9m, 높이 4.6m로 F-15K와 비슷한 크기이며 속도는 마하 1.8, 탑승인원 1명, 작전반경이 최대 3천km에 달함.
- 이에 따라 일본 가데나 기지에 배치된 F-22는 이륙 후 30분 이내에 북한 영변 핵시설에 도달할 수 있는 등 1시간 이내에 북한 전지역까지 날아가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이번 2개 대대의 전진배치가 이뤄지면 지난 2007년 이후 태평양 지역에 모두 6차례 F-22가 배치되는 것임. 이번에 배치되는 F-22 전투기는 한국 공군과의 공동작전능력 향상 차원에서 연합훈련을 가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

마. 미·러 관계

○ 오바마 7월6일 러시아 방문(5/1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월 6~8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11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에서 오는 12월 시한이 만료되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동유럽 미사일방어(MD),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문제, 이란과 북한 핵 프로그램, 경제 위기 극복 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양국은 푸틴-부시 정권 당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확대, 코소보 독립, 동유럽 MD, 그루지야 전쟁 등으로 냉전 이후 최악의 관계를

보이다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관계 개선 노력에 적극적인 모습임. 양국 정상은 지난달 1일 런던 주요 20개국(G20) 금융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만나 START-1 후속 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한 것은 물론 양국 관계 '재설정(Reset)'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각종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양국은 모든 문제에서 관계를 재설정할 훌륭한 기회를 얻게 됐다"며 "양국이 이전의 긴장 관계에서 벗어나 핵무기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바. 중·일 관계

○ "주중 日대사, 신화통신 前간부에 4천만원 제공"(5/14)

- 일본의 미야모토 유지(宮本雄二) 주중 대사가 국가기밀누설죄로 1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신화통신 외사국장(62)에게 정보제공 대가로 총 20만7천위안(약 4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판결에서 밝혀졌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보도함.
- 판결에 따르면 이 외사국장은 미야모토 대사 부임 후인 2006년 9월부터 2007년 7월에 걸쳐 중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돈을 받았으며, 정보 가운데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송금금지 등 중국측의 조치에 관한 정보도 있다고 신문은 전해짐. 이 외사국장은 또 2003년 7월부터 2005년 8월 사이에는 주중 한국대사관의 공사에게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북 일정과 북핵 6자회담의 북·미간 비밀접촉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천달러와 3천위안, 그리고 골프세트를 각각 받았다고 신문은 밝힘.
- 그러나 미야모토 대사와 한국 공사는 입건되지 않았음. 판결은 베이징(北京)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지난 5일 내려진 것으로, 기소장에는 미야모토 대사의 실명이 명시됐으나 판결문에서는 '대사관원'으로만 표기됨. 국제통으로 일본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도 참석한 적이 있는 이 외사국장은 2007년 7월 국가안전당국의 조사를 받고 그 해 12월 체포됨. 그는 정보 제공에 대해 "외국 언론이 이미 보도한 것들이다", "금품은 지인끼리의 선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당국이 정보누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국의 대사가 외교관의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한 스파이죄에 연루되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신문은 지적함. 중국에서는 금년 1월 중국사회과학원 간부가 북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2006년에는 중국의 북한핵문제 담당 대사였던 인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정보를 외국 언론에 흘렸다가 구속된 바 있음.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의 직속기관으로 보도는 물론 지도부용 내부 정보도

취급하고 있음.

○ **中·日, 대륙붕 연장 놓고 마찰 조짐(5/13)**

- 중국 정부가 지난 11일 일본쪽 해역으로 대륙붕을 대거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측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마찰 조짐이 일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3일 전함.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 정보)는 일본측이 주장하는 경계선보다 훨씬 광범위한 곳까지 자국의 대륙붕 인정 범위를 넓혀 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짐. 중국 정부가 이를 신청한 것은 대륙붕이 200해리를 넘어설 경우 이들 부분에 대해서도 연안국의 대륙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유엔 해양법에 근거한 것임. 중국 정부가 제출한 문서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동중국해쪽의 오키나와(沖繩) 해구를 경계선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함.
- 일본측은 그동안 이들 해역의 대륙붕은 양국 해안선을 기준으로 정한 중간선을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옴. 오키나와 해구는 일본측이 제시하고 있는 중간선보다 훨씬 일본쪽에 가까운 만큼 중국측이 실제로 이렇게 유엔에 대륙붕 연장을 요구했을 경우엔 양측간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음. 일본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주장이 맞서는 만큼 유엔 위원회가 중국의 신청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양국 간 대립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신문은 관측함.
- 유엔해양법 조약은 대륙붕이 200해리를 넘어서 이어질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대륙붕 인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대신 13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 유엔이 대륙붕 연장을 인정할 경우 연안국은 해저 자원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됨. 이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태평양 쪽의 대륙붕 연장 인정을 신청한 바 있음.

사. 일·러 관계

○ **일-러, 북방영토 비자없는 교류 중단(5/14)**

- 일본과 러시아간에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에 대한 양국의 '비자없는 교류'가 올들어 중단됐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4일 전함. 비자없는 교류는 양국간 영토분쟁 지역인 북방영토에 사는 러시아 주민과 일본 주민이 비자없이 서로 방문해 우호를 도모하는 사업임. 교류는 일본인이 북방 4개 섬을 비자 없이 방문하고 이곳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일본의 각 자치단체의 초청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옴.
- 그러나 올해 첫 교류 계획에 따라 일본측 방문단이 오는 15일 홋카

이도(北海道) 네무로(根室)를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3일 러시아측으로부터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1차 교류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게 됐다"는 통보가 옴. 러시아측이 내부 문제를 들어 행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 1월 북방 4개 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현장을 찾은 단체에 러시아측이 '출입국 카드'를 요청하면서 일본측이 이를 거부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그동안 러시아는 북방영토에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일본 국민에 대해 여권이나 비자 없이 일본 신분증명서만으로 출입을 허용해옴. 지난 1월 러시아가 출입국 카드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일본은 "이를 제출하는 것은 북방영토가 러시아의 영토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거부했었음.
- 북방 4개 섬은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잇는 20개 도서 가운데 최남단의 에토로후(擇捉)와 구나시리(國後), 홋카이도 북쪽의 하보마이(齒舞)와 시코탄(色丹)을 말함.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차지했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러시아로 넘어감.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러시아 최고 실력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 러·일, 에너지 분야 등 협력 합의(5/12)

- 일본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12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자원 개발과 에너지 절약, 운수 등 각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관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러·일 양국 총리는 또 최대 현안인 북방 4개섬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수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데도 의견을 함께 함. 회담이 끝난 뒤 양국 총리는 원자력 협정 등에 서명함.
- 이날 저녁 일본 총리관저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두 총리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 테러와의 전쟁, 북한 핵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등 국제적인 과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앞서 푸틴 총리는 전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대표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진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푸틴 총리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와도 회담을 가짐.
- 한편 러시아와 일본 양국은 이날 양국에서 다수의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의견 교환회를 갖고 중단됐던 '러·일 지사회의'를 내년 봄 모스크바에서 재개하기로 함. 양국 지사회의는 옛 소련 시절인 1968년 출범한 뒤 1997년 제14회를 끝으로 중단됨. 푸틴 총리도 참석한 이날 모임에는 러시아

에서 사할린 지사와 모스크바 시장 등 8명이, 일본측에서 후쿠오카(福岡) 지사 등 9명이 각각 참가함.

아. 기타

○ **러시아, CFE 개정 협상 제안(5/15)**

- 러시아가 지난 2007년 12월 이행 중단을 선언한 유럽 재래식 무기감축협정(CFE) 개정 협상을 미국을 비롯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에 제안했다고 14일 이타르 타스 통신 등이 보도함.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조약을 살릴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본다"며 "이달 초 CFE에 참여한 관련국들에 공식적으로 조약 개정 제안서를 보냈다."고 밝힘.
- CFE는 1990년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간에 체결한 재래식 전력 감축조약으로 탱크, 전투기, 장갑차, 대포 등 재래식 전력의 보유 상한선을 정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괴, 또는 민수용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감축을 실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 조약은 구소련 해체 이후의 상황을 반영해 1999년 개정됐으며 러시아는 비준 절차를 마쳤지만, 미국 등 다른 회원국들이 몰도바와 그루지야로부터의 러시아군 철수를 내세우며 비준을 미뤄옴.
- 이런 가운데 미국이 동유럽 미사일 방어(MD)계획을 추진하자 러시아는 2007년 12월 이 조약이 자국의 군사력을 제한하면서 나토 확장에 이용됐다며 다른 회원국들이 CFE를 비준할 때까지 이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기로 함. 블라디미르 푸틴 전 대통령은 "다른 회원국들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내세워 CFE 비준은 하지 않고 국경지대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함.
- 러시아의 CFE 이행 중단은 자국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정보 공개와 사찰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무기 생산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이런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 당시 미국과 나토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함.
- 러시아가 1년 5개월 만에 새로운 조약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관측통들은 분석하고 있음. 푸틴-부시 정권에서 동유럽 MD, 나토 확대, 코소보 사태 등으로 냉전 이후 최악의 관계를 보이던 양국 관계가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의 관계 재설정(Reset) 노력으로 해빙 분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지난달 1일 양국 정상이 오는 12월 시한 만료하는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1) 후속 협정을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차제에 다른 군축 협상도 긍정적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짐.
- AP통신도 이날 네스테렌코 대변인의 발언은 크렘린이 오바마 행정

부 하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해짐.

베트남, 러시아제 최신예전투기 12대 구매(5/14)

- 베트남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 6척을 발주한 데 이어 12대의 최신예 수호이30MK2(SU-30MK2)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러시아의 일간신문 베노모스티를 인용해 14일 보도함. 이 신문은 5억달러 규모의 전투기 구매 계약은 지난 1월 러시아의 국영 무기 판매업체인 로소보로노엑스포트와 체결됐으며, 이 금액은 장착 무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함. 이에 따라 미사일과 다른 장착 무기 부분도 수억달러 규모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보도함.
- 앞서 러시아 언론은 러시아가 '대양의 블랙홀'로 불리는 킬로급 636형 잠수함 6척(18억달러 규모)을 베트남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전함. 러시아 언론은 계약이 체결되면 앞으로 1년 내에 베트남에 6척을 모두 인도할 계획이어서 베트남의 해군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내다봄. 이 계약으로 베트남은 인도, 알제리, 베네수엘라, 중국에 이어 러시아의 다섯번째 무기 구매국으로 부상했다고 베도모스티는 설명함.
- 한편 중국 매체들은 베트남 해군이 보유하게 될 킬로급 잠수함의 제원을 자세히 소개하고 베트남의 해상 작전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곁들이면서 베트남·러시아 구매 계약에 크게 주목, 베이징 당국의 불편한 심기를 시사함. 해군력이 약한 베트남이 러시아 잠수함 구매에 나선 것은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파라셀(西沙)군도를 둘러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베트남은 또 최근 연안에서 대규모 해저 가스전이 발견됨에 따라 해상 방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대만 '해협논단' 16일 개막(5/14)

- 중국과 대만의 민간차원 대화 채널인 '해협논단'(海峽論壇)이 오는 16일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개막됨. 14일 홍콩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해협논단에는 대만의 25개 현·시의 대표를 비롯한 8천여명의 대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양이(楊毅) 대변인이 밝혀짐. 특히 이번 해협논단에는 자칭린(賈慶林)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주리룬(朱立倫) 대만 국민당 부주석겸 타오위안(桃園)현장이 참석, 별도의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고 홍콩의 명보(明報)가 14일 보도함.
- 이번 해협논단에서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최근 주창한 해서(海西)경제구 건설방안과 대만기업인들의 푸젠성 투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해서경제구란 '해협서안경제구'를 줄인 말로, 중국의 푸젠성과 광둥(廣東), 장시(江西), 저장(浙江)성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주 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가 보이는 샤먼을 방문, "해서경제구가 중국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중국은 대만의 자본과 중국의 노동력 및 시장을 결합해 이곳을 광둥성에 버금가는 경제중심지로 만들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에너지 확보 다툼에 군사적 마찰 생길 수도"(5/13)

- 러시아 정부가 에너지 확보 경쟁에 군사적 마찰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13일 이타르 타스 통신 등이 보도함. 이는 이날 러시아 안보위원회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된 '2020 러시아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를 통해 확인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서명한 13페이지짜리 이 보고서는 러시아 내 안보 관련 기관들이 수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 안보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가 직면한 도전과 정부 주요 정책 과제가 요약돼 있음.
- 보고서는 국제 관계가 에너지 자원 확보 문제를 두고 형성될 것이며 자원 확보 경쟁 속에 군사력을 이용하려는 시도도 배제될 수 없다고 경고함. 현재 러시아는 구소련 국가의 천연가스 수출 루트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지만, 서방이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북극해 등으로 접근을 시도하면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음. 또 보고서는 군사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려는 특정 국가의 주요 정책들이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되며 거기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계획도 포함된다고 지적함.
- 이어 보고서는 미국이 MD 시스템을 유럽에 배치한다면 국제 및 지역 안보 유지의 기회가 상당히 적어질 것이라고 강조함. 미국은 이란 등 불량국가의 잠재적 미사일 위협에 맞서 폴란드와 체코에 MD 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고 러시아는 이를 자국 안보에 위협으로 간주,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보고서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며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를 지목하면서 나토 지향적인 유럽-대서양 지역의 불안은 국제 안보에 점증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러시아는 발트 3국에 이어 옛 소련 국가들로 나토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못마땅해하고 있음. 보고서는 러시아의 장기 국가적 관심사는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러시아는 합리적, 실용적 외교 노선을 취하고 새로운 무기 경쟁을 피하는 정책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한-카자흐, 실질협력 액션플랜 채택(5/13)

-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수도인 아스타나의 대통령궁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단

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함. 액션 플랜에는 경제·통상뿐 아니라 에너지·광물자원, 금융·투자 및 카자흐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인프라, 정보통신, 농업, 환경·수자원, 문화예술·언론매체·관광·체육, 교육·혁신기술·보건, 노동·사회보장, 기술원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포함돼, 양국간 호혜적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임.

- 양 정상은 또 카자흐의 자원과 우리의 자본·기술을 결합하는 '윈-윈 전략'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양국 관계를 정치, 경제,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함. 이와 관련,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사업 협력협약서와 함께 잠빌 해상광구 석유탐사사업 및 보쉐콜 동광 개발, 브로드밴드 인터넷망 구축 협력, 광물지원 공동개발 협력 강화를 포함한 9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 관계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감.
- 발하쉬 발전사업은 25억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65%-1주'의 지분을 갖게 되며, 오는 8월까지 주식인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양 정상은 아울러 잠빌 해상광구 공동개발 등 카자흐내 주요 국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는 한편 탄화수소자원 탐사·개발 협력 및 우라늄 분야 협력 확대, 중소형 원자로(SMART) 분야의 협력 증진도 추진키로 함.
-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처를 비롯한 환경 분야와 농업·보건 분야 협력 강화 ▲한-중앙아시아간 구체적인 협력 분야 적극 발굴 ▲알마티에 설립되는 핵의학생물리학센터의 방사선 생물학장비 공급 공동사업 ▲국제테러리즘 및 초국가범죄 대처를 위한 공조 ▲카자흐의 2011년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와 2012년 여수박람회 상호 지원 ▲카자흐내 고려인 지원 등에도 합의함.
- 이 대통령은 카자흐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운송·교통 허브 건설 계획에 지지를 표명했으며, 양국은 철도와 도시교통 시설, 인프라 건설 분야의 협력을 확대키로 했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사태 해결이라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함. 또 이 대통령이 카자흐가 국토가 넓고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 우리의 와이브로 기술을 도입해 보급하면 경제적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삼성을 지목하며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회담 뒤 "양국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서 "한국이 카자흐의 산업 다변화를 지원하고 카자흐는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해 상호 윈윈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와 한국이 10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더 많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기대하고 이

를 위해 카자흐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 오바마 "PSI 국제제도화 필요"(5/13)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영속적인 국제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가가 PSI에 가입해 기여해주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부터 14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주(州)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운영전문가그룹(OEG: Operational Experts Group) 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함.
- 이 소식통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 안보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보다 시급하고 극단적인 위협이 없다"면서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PSI와 같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들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이 PSI를 영속적인 국제제도 전환시킬 것을 촉구했다"면서 "PSI는 국가와 비국가단체 간 WMD와 운반수단, 관련 물질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며 PSI에 대해 강력히 지지한다고 역설했다"고 전함.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WMD의 위협에 노출돼 있으므로 모든 국가가 이러한 위협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며 앞으로 모든 국가가 PSI에 가입해 PSI가 영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기여해 주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들은 말함. 이들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WMD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PSI 회원국들과 협력하길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음.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선거공약과 지난 4월5일 프라하 연설을 통해 밝힌 PSI 제도화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해옴.

○ 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재선(5/12)

-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 종종 비난을 받고 있는 중국이 12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재선됨. 중국은 이날 47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중 18개국을 새로 뽑는 유엔총회에서 191개 회원국 중 167개국의 찬성표를 얻어 3년 임기의 이사국에 선출됨. 이로써 중국은 2006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로 만들어진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에 이어 연속으로 이사국에 뽑혔다고 중국 유엔대표부 대변인이 밝힘.
- 이 대변인은 중국은 그동안 인권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뤘고 특히 초대 이사국에 선출될 때 다짐했던 인권 개선 노력을 지켜 이사국에 재선됐다고 설명함. 한편 미국은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이번에 첫 선출됨. 미국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인권이사회의 창설 자체를 반대하며 이사회 기능에 의문을 제기,

이사회와 거리를 둬왔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방향을 바꿈.

- 이밖에 새로 선출된 18개 이사국에는 러시아, 쿠바, 방글라데시,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등이 포함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역별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각각 13개국, 라틴아메리카 8개국, 서유럽·기타지역 7개국, 동유럽 6개국이 배정돼 있음. 그러나 이번 인권이사국에 선출된 국가 중에는 자국의 인권보호 문제와 관련해 인권단체들로 비난을 받는 국가들이 있고 이사국 선출 경쟁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日 민주당 오자와 대표 사의 표명(5/11)

-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66) 대표가 11일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함. 오자와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도쿄(東京)의 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거당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표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힘.
- 오자와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담긴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관련 법안에 대한 중의원 심의가 끝나는 대로 사퇴하겠다고 덧붙였음. 현재 중의원에서 심의하고 있는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여당이 이번주 중 중의원 본회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철저한 심의를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중의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주 중 중의원을 통과, 참의원에 회부될 가능성이 큼. 오자와 대표는 금년 3월 자신의 측근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전격 구속되면서 당 안팎에서 대표직 사퇴 압력을 받아옴.
- 오자와 대표의 사퇴는 오는 9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치러질 예정인 차기 중의원 선거 정국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됨. '일본 정계의 풍운아'로 불리는 오자와 대표는 2006년 4월 대표에 선출된 뒤 지난해 8월 무투표로 3선에 성공하는 등 3년간 민주당을 이끌어옴. 47세에 자민당 간사장을 지낸 그는 1993년 자민당 분열시 지지자들을 이끌고 탈당, 신생당을 결성해 그해 8월 비(非)자민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을 발족시킴. 이듬해 새로 결성한 신진당 당수를 지낸 뒤 당을 해체하고 자유당을 창당, 1999년 자민당과의 연정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이후 2003년 9월 민주·자유 양당이 합당해 거대 여당에 맞서 양당제의 틀을 갖춘 현재의 민주당을 출범시킴.
- 민주당은 여야 정권교체 목표를 향해 복잡한 당내 분열요인들을 묻어두고 오자와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을 유지해왔으나 그의 사퇴로 주류와 비주류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경우 차기 총선 전략에도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새롭고 참신한 집행부를 구성, 결속을 유지하며 자민당과 차별화를 내세울 경우 집권 전망이

한층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오자와 대표의 정치자금 문제 이후 내각 지지율이 오르는 등 반사이익을 누렸으나 당사자인 오자와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자력으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 오자와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연휴기간 숙고 끝에 사퇴를 결단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경제, 사회를 근본부터 바꿀 수 있도록 민주당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 여야 정권교체의 구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숙원으로, 이를 위해 몸을 던지기로 했다"고 설명함. 오자와 대표는 그러나 자신의 꿈이 정권교체에 있는 만큼 의원직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차기 선거에 나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밝힘.

○ 日, 이라크 유전 개발 적극 나선다(5/11)

- 이라크 유전의 권익 확보를 위해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1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산유국과는 달리 구미자본의 영향력이 적은 이라크를 대상으로 실적을 쌓아 해외유전 개발에 탄력을 주는 '히노마루 프로젝트'를 수립함.
- 이라크는 지난 2003년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외화획득을 통한 전후부흥을 위해 외국자본에 유전권익을 개방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이라크는 현재 확인매장량 165억배럴의 루메일라 유전 등 20건 정도의 개발안건을 대상으로 입찰을 예정하고 있어 빠르면 올여름 낙찰기업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짐.
- 입찰에는 구미 기업 등 44개사가 참가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신일본석유, 국제석유개발제석(INPEX), 석유자원개발,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미쓰비시상사 등 5개사도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함. 이달 중 결정되는 남부유전의 개발권을 놓고서는 신일본석유, INPEX, 닛키(日揮)상사 등 3사가 이탈리아, 스페인의 자원회사와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의 이라크 유전 진출은 석유수입원의 분산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과제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일본은 2008년 원유의 87%를 중동에서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비중이 50%를 넘고 있음. 이라크로부터의 수입은 1%에 불과한 상태임. 일본에서는 그러나 이라크의 치안이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기업들이 이라크에 진출했을 경우 상당한 리스크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한-우즈벡, 에너지·자원협력 전방위 확대>(5/11)

- 이명박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간 11일 정상회담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경제뿐 아

니라 정치와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음. 특히 이 대통령 취임 후 3번째인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원부국인 우즈벡과의 에너지·자원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키로 합의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원외교'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르길 가스전·플랜트사업 금융 양해각서와 찜칼타사이 몰리브덴·중석 공동탐사 계약, 나망간·추스트 탐사계약 의정서 등 12건의 양해각서와 4건의 계약을 체결함. 16건을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자원 분야 7건, 산업·금융분야 3건, 인프라·물류분야 6건 등임. 이와는 별개로 양국 기업체들이 앞으로 여러 건의 계약을 별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짐.
- 한마디로 양 정상의 에너지·자원협력 확대 약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것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만큼 '자원 파이프라인'을 든든하게 구축한 셈임. 이 가운데 한국석유공사와 우즈벡국영석유사(UNG)간에 체결한 나망간·추스트 탐사계약 의정서는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100% 지분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음.
- 특히 서페르가나 및 취나바드 지역을 포함해 5개 신규광구에 대한 추가탐사 사업을 진행키로 한 것도 결코 의미가 적지 않음. 우리측이 이들 광구의 매장량 등에 대한 독점평가를 한 뒤 유망성이 인정될 경우 본격적인 탐사협상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장차 우리의 소중한 해외자원이 될 것으로 보임. 이런 경제적 성과는 양 정상간 개인적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석임. 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친분관계를 구축해 온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돈독한 우의를 과시했고, 그런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쳐 에너지·자원분야의 여러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임.
- 실제 카리모프 대통령은 예고에 없는 깜짝 공항영접으로 '파격의전'을 선보인 데 이어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를 직접 동행하는 것을 비롯, 이 대통령의 우즈벡 일정 대부분을 함께 하는 성의를 보임.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올 초 천명한 이른바 '신(新)아시아 외교구상'을 구체화하는 실질적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음. 신아시아 구상은 미·중·일·러 등 주변 4강(强)과의 안정된 관계를 바탕으로 대(對)아시아 외교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가 반정부 시위로 무산되면서 이번 중앙아시아 2개국 순방이 아시아 신흥 국가들과의 사실상 첫번째 외교무대가 됐다는 평가임.

李대통령 베트남특사 이병석의원(5/11)

-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원장)은 오는 6월1-2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특별정상회담은 '신아시아 외교'의 핵심지역

인 아세안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11일 밝혀짐.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베트남을 찾은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다소 위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 예전의 상위 투자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참고 1] 〈표〉 한-우즈벡 체결 주요 양해각서.계약 (연합뉴스, 5/11)

▲수르길 가스전·플랜트 사업 금융 양해각서 = 수출입은행 및 수출보험공사와 가스공사와 UNG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협력

▲찜칼타사이 몰리브덴.중석 공동탐사계약 = 공동탐사 협력 양해각서 후속조치로 본계약 체결을 통한 몰리브덴·중석 공동탐사

▲나망간·추스트 탐사계약 프로토콜 = 08년 11월 체결 탐사계약 유효기간 가산일 결정

▲우즈벡 광산공동개발 및 현대화사업 양해각서 = 알마릭 광업공사 현대화 프로젝트 진행

▲광물자원DB 구축 및 탐사협력 양해각서 = 디지털 지질지도 활용 공동연구 및 우즈벡 전문가 교육

▲5개 신규광구 기본합의서·양해각서 = 서페르가나, 취나바드 등 유.가스전 탐사·개발

▲NBU 및 ASAKA 은행 전대라인 증액계약 = 현지 한국기업 지원을 위한 전대라인 증액 계약. 1.2억달러→1.9억달러

▲NBU 및 ASAKA 은행 전대라인 확대 양해각서 = 나보이특구 지원을 위한 전대라인(2억달러) 신설

▲나보이 상하수도시설 EDCF 지원 양해각서 = EDCF 1천760만달러 지원. 10년거치 30년 상환

▲철도분야 협력 양해각서 = 철도분야 협력

▲국토부-대외경제부간 양해각서 = 국제물류센터 건설, ITS 개발, 국내·국제 복합운송 촉진

▲지적·토지등록 양해각서 = 지적도,지적등록부 제작을 위한 공동사업

▲해외건설협회-엔지니어링 협회간 양해각서 = 건설 및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상호교환

(타슈켄트=연합뉴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5/11/0503000000AKR20090511140500001.HTML

[참고 2] 〈개성공단 일지〉 (연합뉴스, 5/15)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현대그룹과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간 합의로 2000년 8월 태동된 개성공단이 15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다음은 남북간 개성공단 조성 합의부터 최근까지 개성공단 관련 주요 일지.

◇2000년
▲ 8.22 = 현대-北아태평화위, 총 6천612만㎡ 개발 합의서 체결

◇2002년
▲11.20 = 北, 개성공단지구법 제정
▲12. 8 =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통관, 검역, 통신합의서 체결
▲12.27 =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2003년
▲ 6.30 =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 8.20 =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

◇2004년
▲ 1.29 = 남북 당국, 개성공단·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 체결
▲ 4.13 = 현대·토공-북한 개성공단 330만㎡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계약 체결
▲ 4.23 = 통일부, 1단계 330만㎡ 협력사업 승인
▲ 5.18 = 토공, 시범단지 9만3천㎡ 분양 공고
▲ 6.14 =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23개 기업 및 1개 기관)
▲10. 5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10.20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
▲12.15 =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5년
▲ 8. 1 = 토공, 본단지 1차 16만9천㎡ 분양 공고
▲11.22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북측 협력부 근무 시작
▲12. 5 = 본단지 1차 입주기업 공장건축 시작
▲12.28 = KT, 개성공단 통신공급 개시

◇2006년
▲ 5.22 = 북한측 통행검사소 신축건물 개소
▲ 5.31 =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10.31 = 시범단지 23개 입주기업 완전 가동
▲11.21 = 북한근로자 1만명 고용 돌파
▲12.21 = 한전, 10만㎾ 남북 송전선 연결

◇2007년

▲ 1.30 = 총생산액 1억달러 달성
▲ 4.30 = 토공, 본단지 2차 175만㎡ 분양 공고
▲ 5.25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9.30 = 공단입주기업 누적 생산액 2억달러 달성
▲10. 4 = 남북 정상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한 선언' 합의
▲10.16 = 개성공업지구 1단계사업 부지조성 준공식
▲11. 5 = 북한근로자 2만명 고용 돌파
▲12.11 = 南문산-北봉동 구간 경의선 열차 운행 시작
▲12.17 =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지질조사 착수
▲12.31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범

◇2008년

▲ 3.24 = 북,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 3.27 =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상주 남측 당국자 11명 전원 철수
▲ 6.22 =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 남측의 '3통합의' 불이행으로 개성공단 위기 조성 주장
▲ 6.24 = 北서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공단→남측' 인력·물자의 통행시간 제한 통보
▲ 7. 4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3만명 돌파
▲10. 2 =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개성공단 사업 등에 부정적 영향' 경고
▲11. 6 = 北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 6명, 개성공단 현지 실태 점검
▲11.12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 전통문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 통보
▲11.24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12월1일자로 개성관광 전면차단 및 개성공단·금강산관광지구의 남한 당국관련 기관·기업 상주 인원 및 차량 선별 추방 입장 통보
▲11월중 = 공단 입주기업 누적 생산액 5억달러 돌파
▲12. 1 =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 880명으로 제한하고 남북통행시간 대 및 통행허용 인원을 축소하는 등 내용의 12.1 조치 시행

◇2009년

▲3.9~20 = 북,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3차례 걸쳐 육로통행

차단

▲ 3.30 = 북,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탈북책동·체제비난' 등 혐의로 억류·조사 개시

▲ 4.16 =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운영 관련 중대문제 통지하겠다'며 남측 당국자 초청

▲ 4.21 = 남북 당국자 개성서 접촉

▲ 5. 4 = 북, 남측에 6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접촉 제의

▲ 5. 5 = 정부, 북에 '6일 접촉' 불가 통보

▲ 5. 8 = 정부, 북에 15일 오전 10시 개성실무회담 개최 제의

▲ 5. 9 = 북, 남측에 12일 회담 개최 역제의

▲ 5.11 = 정부, 북에 15일 회담 개최.유 씨 문제 의제 포함 의사 전달

▲ 5.12 = 오전 남측 관계자 3명 개성공단 방문..남북, 개성공단서 사전 실무접촉

▲ 5.13 = 남측 관계자, 북에 실무접촉 제의-북 거부

▲ 5.14 = 정부, 북에 회담 대표자 명단 전달-북 접수 거부

▲ 5.15 = 정부, 북에 18일 회담 개최 제의

hyunmin623@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5/15/0511000000AKR20090515057751043.HTML